

2006-09 | 책임연구보고서

**통일대비 정치교육의 과제**  
**-남북한 정치교육 비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2006-09 | 책임연구보고서

**통일대비 정치교육의 과제**  
**-남북한 정치교육 비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연구관 조 용 관

# 통일대비 정치교육의 과제

-남북한 정치교육 비교를 중심으로

조 용 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부장)

## 목차

- |                      |                       |
|----------------------|-----------------------|
| I. 머리말               | IV. 북한 정치교육의 목적과 내용   |
| II. 정치교육의 개념과 기능     | V. 남북한 사회통합의 정치교육적 과제 |
| III. 남한 정치교육의 목적과 내용 | VI. 맺음말               |

## I. 머리말

북한 핵문제에 의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해결의 기미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들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과 평양 및 개성공단을 다녀왔으며, 남북 간의 교역도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91년에 257명에 불과하던 방북인원이 '04년에는 26,213명으로, 또 작년에는 87,028명으로 늘어났고,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도 '94년 0명에서 '03년에는 1,023명, '05년에는 1,313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남북한 교역도 '91년에 1억 천백만 불에서 '04년에는 6억 9천 7백만불, '05년에는 10억 5천 5백만불에 이른다.<sup>1)</sup> 비록 퍼주기라는 비난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인적·물적 교류는 오래 동안 적대적 관계로 인해 교류가 없었던 남북한이 서로를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1) <http://www.unikorea.go.kr/index.jsp>(검색일. 2006. 7. 31)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우리와 같이 분단된 독일이 통일된 것은 민족분단이란 비합리적 상태를 정상적 원위치로 만들어야 한다는 독일민족의 막연한 희망이 동독에서 발생한 긴박한 사태발전이 도화선이 되어 실현된 정치적 사건이었다. 통일되기 이전에 이미 동서독 간에는 연간 1천만 명이 오가는 인적교류와 2백억 마르크(1백 40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을 통하여 통일되었을 때의 상황에 도달하여 계기만 있으면 통일이 적극 추진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다.<sup>2)</sup> 동독체제에 대한 서독체제의 절대 우위는 독일통일을 평화적으로 견인해 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동독주민들은 동서독간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우열관계를 인식하는 한편,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으로 인하여 소련이 동독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마침내 민중봉기를 통하여 서독체제를 통일국가체제로 선택함으로써 독일통일이 달성되었던 것이다.<sup>3)</sup> 독일통일이 이루어 졌지만 실제 많은 독일인들은 그들이 원하던 통일이 그렇게 쉽게 빨리 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sup>4)</sup>

역사적 통일을 이룬 '90년 초 당시 콜 독일수상은 5년 이내 동독에서도 라인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엘베강의 기적을 재생해 내겠다고 장밋빛 미래를 동독인들에게 약속했으며, 동시에 서독인에게는 이러한 제2의 기적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인상 없이 동서독의 경제부흥을 통해 조달될 수 있다고 장담한 바 있다.<sup>5)</sup> 그러나 통일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콜수상이 밝힌 장밋빛 미래는 사라지고 많은 후유증만 남고 있다.<sup>6)</sup> 동서독은 통일 이후 눈에 보이는 베를린장벽은 사라졌으나 동서독 주민들 간의 '마음의 장벽'은 여전히 남아있거나 더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 갈수록 동서독인은 처음 만날 때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서로를 비방하는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동독인은 서독인을 '거만하고', '마치 승리자처럼 생각하고 있고', '생색을 내는' 사람 등의 형용사를 붙여서 서독사람을 '베씨'(Wessi)로 부르는 반면, 서독인은 동독인을 '게으른 민족', '시중만 받고 싶어 하고', '대단히 게으르고 공격적'이라고 '오씨'(Ossi)로 부른다. 이런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편이고, 서로 다른 점이 같이 사는 생활 속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sup>7)</sup>

2) 전경수·서병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 18.

3)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88.

4) 독일 통일은 준비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 진 것이다. 전경수·서병철, 앞의 책, p. 18; 손기웅,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기본방안," 『북한연구학회보(창간호)』 (북한연구학회, 1997), p. 234.

5) 전성우,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6.

6) 독일의 5현자(賢者)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위르겐 동게스 박사는 2006년 9월 15일 세계경제연구원과 무역협회 주관으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 이후 독일경제 침체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통일 이후의 독일 경제에 대해 매우 어둡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 2006. 9. 15.

7) 91년 독일연방의회에서 발행한 클라게스(Klages)의 논문은 "구 서독인이 동독인을 이등인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서독인의 28%가 그리고 동독인의 71%가 그렇다고 대답할 정도로 동서독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다. 김해순, 『통일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부 통일교육원), p. 178; 박상봉, 『남북경제통합론』 (서울: 나남출판사, 2004), p. 29.

통일 후 독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베를린자유대학 박성조교수는 동서독 통일을 실패라고 규정짓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서독인들의 동독인 인성에 대해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남북한 통일이후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북한 사람들 자체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8)</sup> 또 독일통일 이전에 서독관리로 '70년대 후반부터 전독(全獨逸)문제연구소장을 지냈던 테틀레프 쿤(Detlef Kuehn)박사는 통일후 10년이 지난 2001년 “만약 독일이 다시 통일을 할 기회가 있다면 서독 전문가들이 동독지역의 경제부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능력보다 동독 주민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sup>9)</sup>

독일이 통일이전 동서독간 오랜 기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하여 상호간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통일이후 장기간 사회통합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동서독의 사회통합이 정치·경제적 통합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양독 주민들의 심리적, 의식적 갈등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sup>10)</sup> 독일과 달리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의 경우, 독일보다 힘든 사회통합의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11)</sup>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사회와 북한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북한주민들이 어떤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과정을 거쳐 어떠한 가치관을 습득하여 왔으며, 나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정치이념에 따라 상이한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남북한 주민들은 세계관, 국가관, 역사관, 인생관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언어, 사고, 가치관, 생활방식과 태도 등에서 커다란 이질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격차와 이질화는 그 상이한 체제의 심화로 인해 어느 분단국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남북한 주민의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없다.<sup>12)</sup> 2005년도 통일연구원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국민 1, 000명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9%가 통일이후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는 사항은 가치관의 혼란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sup>13)</sup> 이는 남북한 사회가 통합되었을 때, 남북한 주민간

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pp. 16-25; 김해순, 위의 책, p. 238; 전경수·서병철, 앞의 책, pp. 63-65.

9) 이 내용은 2001년 테틀레프 쿤(Detlef Kuehn)박사가 이화여대 김석항박사와의 대담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석항, 『남북 주민간 갈등 양상과 기독교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기독교북한선교회, 2006), p. 9

10) 동서독이 통일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동서독사람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앞의 책, p. 22.

11) 고정식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239-240.

12) 박용현외, 『북한통일 대비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서울 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연구위원회, 1994.12), p. 8.

13) 박종철, 박영호, 손기웅, 전성호, 최수영,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통일연구원, 2005), pp. 216-217.

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 심리로 인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4)</sup> 가치관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특히 북한지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이념적, 문화적 격차로 인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한 치안유지가 요청될 것이다.<sup>15)</sup>

남북한 통일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고려해볼 때, 통일은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이 글은 동서독 통일에서 나타나는 통일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정치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단이후 남북한 체제가 각자가 상정한 인간형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치교육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로 형성된 서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살펴 보려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 정치교육에 대한 논문들이 남북한 교과서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사회화 과정을 비교하는 것이어서,<sup>16)</sup>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북한 주민의 통합문제는 간과한 면이 있다. 여기서는 단순한 남북한 교과서 내용분석이 아니라 거시적 시각에서 분단이후 남북한이 추진한 정치교육과 관련한 정책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나아가 정치교육의 주요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정치교육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

14)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부적응이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중에서도 폭력과 교통범죄가 많다. 교통범죄는 지리나 법규를 잘 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나 폭력이 전체 범죄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향후 통일되었을 경우 폭력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탈북자 범죄현황(2000-2004.6)>

연도별	계	형법범								특별법범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문서위 변조	기타	교통	기타
누계	845	3	8	23	294	18	19	18	33	362	67
'04년 6월	194	1	0	5	81	3	3	3	7	82	9
2003년	216	2	2	4	70	5	7	2	9	109	6
2002년	206		3	7	69	5	4	4	9	79	25
2001년	127		2	5	42	3	7	7	5	50	11
2000년	102		1	2	32	2	2	2	3	42	16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90/17/pdf/170549\\_981.HWP.PDF](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90/17/pdf/170549_981.HWP.PDF)(검색일 2006.7.28)

15) 김현성, 『통일과도기 치안수요예측과 경찰대응방안연구』(용인: 치안연구소, 1998), p. 35.

16) 최근 5년간 남북 정치교육과 관련된 논문 8편 중 6편이 교과서 분석을 기초로 한 연구이다. 김은정, <남북한 정치교육 비교 :정치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최춘영, <북한 소학교 공산주의도덕 교과서 분석 연구 :정치사상교육 내용을 중심으로>(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주혜련, <남북한 중등학교 정치교육의 비교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이순복,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교육 내용 분석>(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3); 최재남, <북한 정치교육과 체제유지와 의 상관성 연구>(경성대 대학원 석사, 2002); 이재철,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내용 분석 :고등중학교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2); 진유범, <남북한 정치교육 비교 연구>(인하대 대학원 박사, 2001); 황의정, <남북한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초등, 인민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송실대 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 2001).

보려 한다. 이는 결국 불원간 다가올 통일 이후 야기될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상적·이념적 갈등과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사회 안정화를 통한 치안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직접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이나 심층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이 북한연구<sup>17)</sup>가 그러하듯이 갈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한 문헌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7) 북한관련 연구는 직접 갈수 없고 자료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 문헌 연구에 따를 밖에 없다. 최완규, “북한연구 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 2003), pp. 11-30.

## II. 정치교육의 개념과 기능

### 1. 정치교육의 개념 정의

정치와 교육의 관계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서양의 Plato나 Aristoteles 이래 정치철학자들은 “국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학교도 존재한다.”라든지, “국가가 원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며 정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sup>1)</sup> 동양의 공자도 정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sup>2)</sup>, 근대에 들어서는 Rousseau나 Mill, Lock 등 많은 저명한 사상가와 학자들도 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sup>3)</sup>. 그러나 정치와 교육의 관련성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정치와 교육의 직접적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적 영역을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이라 한다.<sup>4)</sup>

정치교육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달리 정의되고 있으나 크게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정치교육은 ‘한 나라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한 나라가 지향하는 정치이념에 따라 인간교육의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에 역점을 두는 민주주의의 정치교육과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정치체제에 절대 복종하는 체제 순응적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주의의 정치교육은 다를 수밖에 없다<sup>5)</sup>.

한편 좁은 의미의 정치교육이란 ‘사회질서와 체제 내지 정치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의 지지 또는 합의기반을 형성하는 교육적인 노력과정’으로 정의되며, 이때 사용되는 체제란 비단 정치체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문화체제, 사회체제, 인성체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이다<sup>6)</sup>. 좁은 의미의 정치교육 개념은 주로 서구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대체로 정치질서나 정치체제의 안정, 유지, 발전과 정치

---

1) James S. Coleman(ed.),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65), p. 6.

2) 중국은 한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로 유가사상이 국가이념이 됨으로써 경학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도덕교육과 인격교육 문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제 안정을 기하여 왔다. 任時先, 『中國教育思想史』(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78), pp. 43-44.

3) 김용민, “서양정치사상에 있어서 정치와 교육,” 『세계화와 민주화시대의 정치와 교육』(한국정치학회, 1997), pp. 1-2.

4)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국민윤리교육’으로, 북한에서는 ‘정치사상교육(교양)’으로 부르고 있으며, 일부 학자는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정치교육을 ‘교화(indoctrination)’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편적 학술적 용어인 ‘정치교육’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정치교육 개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이종석, 「북한 정치교육의 변천연구」(관동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pp. 13-18; 김용신, 『강한 사회과 교육과 정치교육론』(서울: 교육과학사, 2007), pp.14-18 참조.

5) 박용헌, “정치교육의 성격과 과제,” 『정치교육』(서울: 형설출판사, 1983), pp. 12-13.

6) 위의 논문, pp. 14-15.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learner)의 입장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형성(New nation-building)을 하고자 하는 신생국이나 선진화를 추구하는 개발도상국, 그리고 종래의 이념이나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사회주의국가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정치교육은 ‘한 국가가 그 생활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생활공동체에 관련된 지식과 능력, 태도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 2. 정치교육의 기능

어느 국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을 통하여 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국가나 사회는 없다. 고대 중국에서는 유가의 이상사회인 대동사회(大同社會)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자를 비롯한 유가와 이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군주들에 의해 경학사상(經學思想)을 기본으로 하는 도덕교육과 인격교육 및 문화교육을 가르쳤다.<sup>7)</sup>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양에서도 Plato나 Aristoteles, Thomas More, Rousseau 등도 정치와 교육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날 정치교육과 유사한 교육의 중요성과 기능을 강조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이렇게 실시해 온 정치교육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sup>8)</sup>

첫째, 정치 및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의 모든 질서가 법과 제도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법으로 규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교육이다. 비록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정치나 사회질서에 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학습시킴으로 정치 및 사회 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한무제 때 동중서(董仲舒)로 하여금 유가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여 유가교육을 확충한 것도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교교육을 통해 조선왕조의 정치적 안정을 기한 것도 교육을 통한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국민적 일체감 형성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국민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지 않고 국가발전을 가져온 국가는 없다. 정치교육은 바로 국민들에게 동일한 국민, 또는 같은 민족이라는 국민적 일체감을

---

7) 任時先 앞의 책, pp. 43-44.

8) 박용현, 앞의 논문, pp. 23-24.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한다. 영국정부가 1980년대 후반 국민들의 정체감의 위기와 준법정신 결여 등으로 인해 사회결속력이 약화되자 국가차원에서 정치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국민적 일체감 형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sup>9)</sup>

셋째, 구성원들을 국가정책 목표달성에 동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교육은 일반적으로 그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이념 및 정치이념, 그리고 목표 문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가치관을 설정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사회적·국민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교육의 이러한 기능은 서구 선진국보다 급속한 사회변동과 사회의 구조적 분화(differentiation)로 인해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마찰로 국민통합(national integration)이 어려운 신생국이나 근대화를 추구하는 제3세계 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sup>10)</sup> 과거 우리나라의 유신정권이나 구소련, 중국정부 및 북한정권 수립이후 실시한 정치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정치교육은 개인의 건전한 비판력·판단력을 제고시켜 정치적 자아 성장을 도와주며 나아가 부당한 정치적 간섭과 국내외 체제 위협에 대한 저항 및 방어하는 기능을 한다.<sup>11)</sup> 생활공동체의 안정과 유지라는 보수적 성향을 띤 정치교육이 지나치게 국민적 일체감이나 사회통합만을 강조하다보면 과거 일본이나 북한처럼 국가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체제와 개인 간의 부단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 독일과 같이 시민들 스스로가 사회적 환경을 바르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비판력과 판단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sup>12)</sup>

다시 말해서 정치교육은 기존의 사회체제에로의 통합, 국가의식의 생산, 민주주의의 어떤 게임-지배 권력을 장악하고, 그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규칙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한 체제를 위한 조작적 통합이나 조작을 통한 통제에 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정치교육만이 역사적으로 불필요해진 정신적, 정치적 감독이나 지배로부터 해방되도록 도울 수 있고, 아울러 사회변화의 잠재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정치교육은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즉, 그들은 개인적인 삶과 사회정치적 발전을

9) 홍득표, “서양 정치교육의 체제와 내용,” 『세계화와 민주화시대의 정치와 교육』, pp. 5-6.

10) 박광주, “집권관주의적 신중상주의 국가론: 권위주의 국가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 한국정치와 국가』 (서울: 법문사, 1986), pp. 187-191.

11) 한민길, “‘개방적’ 정치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과제,” 『세계화와 민주화시대의 정치와 교육』, p. 6.

12)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5-21.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삶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사회의 증대하는 조작기술의 정교함에 대항하고, 인간을 자신의 역사 및 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주체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판적 이성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자신의 해방과 방해가 되는 지배와 조작 메카니즘을 투시할 수 있고, 사회적 조작에 대항하는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계몽으로써 정치교육은 사회제도, 구조와 동인에 관한 합리적 인식을 의미한다.<sup>13)</sup>

요컨대 정치교육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건전한 비판능력을 제고시켜 올바른 정치적 자아가 형성될 때, 국가로부터 부당한 압력에 대해 저항권<sup>14)</sup>을 행사할 것이며, 나아가 생활공동체를 위협하는 외침에 대해서도 방어하려 할 것이다.

---

13) 권세기,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논문집), p. 105.

14) 저항권에 대한 법률학자들 간의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저항권 행사는 극도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저항권행사 요건은 필요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李寬熙, 『韓國民主憲法論 I』(서울: 博英社, 2004), pp. 76-81.

### Ⅲ. 남한 정치교육의 목적과 내용

#### 1. 남한 정치교육의 목적

사회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전통의 틀 속에서 끌어들이고, 나아가 한 나라가 이념으로 삼는 바람직한 인간 그리고 국가발전에 유익한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모든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교육에 포함에 된다 할 수 있으며, 이 때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정치이념이나 체제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sup>1)</sup>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주로 교육이념에 나타난다. 여기서 교육이념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위의 지침 구실을 하는 이상적 준거를 의미한다.<sup>2)</sup>

한국의 교육이념은 일제 식민지 해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하면서 설정하게 된 우리 나라교육의 기본이념은 민족주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의 것으로서, 그 이후 헌법이 무려 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야 할 정도로 큰 정변이 자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설정한 그 기본이념은 최근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념의 구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과제의 설정은 시대에 따라 다소 달라지기도 한다.

미군정하에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설정한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에 터하여, 인격이 원만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한다.”였다.<sup>3)</sup> 이러한 교육이념의 기본정신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공식출범한 이후 제정한 교육법(1949. 12. 31. 법률 제86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것은 오늘날 까지 계속 우리나라 교육활동의 지도지침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 교육법 제1조와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

- ① 신체의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 ②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 평화 건설에 기여하게 한다.

1) 이계희, “北韓의 思想政策과 政治教育,” 『統一問題研究』(국토통일원, 1989.봄), pp. 235-236.

2) 박용헌, 『가치교육의 변천과 가치의식』(서울: 서울대출판부, 2002), p. 13.

3) 中央大學校 韓國教育問題研究所, 『文教史』(서울: 中央大學校 出版局, 1974), p. 13.

- ③ 민족의 교육문화를 계승 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 ④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 ⑤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경애의 정신으로 조화 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 ⑥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 창작하고, 자연의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며, 화해와 명량한 생활을 하게 한다.
- ⑦ 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제1조의 진술은 그전에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에 터하여”를 “홍익인간의 이념아래”로 수정한 것이며, “인격이 원만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한다.”를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로 바꾸고,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천에 기여하게 함”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은 ‘홍익인간’을 국가이념으로 계승한다는 종전의 민족주의 이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를 다소 완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자구 수정과정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나 교육법 제1조의 내용은 민족전통의 계승을 강조하려는 민족주의 진영과 서구사회에서 발달해 온 근대적 가치를 수용하려는 민주주의 진영 간에 합의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교육이념이 설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홍익인간’이란 글자 그대로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뜻으로 인간존중, 이타, 공동선, 공익, 박애 등 민주주의의 주요가치들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 ‘홍익인간’은 단군설화에 나오는 건국이념으로 이를 계승한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의 것이며, 나아가 서구사회에서 발전된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4)</sup>

이와 같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의 교육이념은 제1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도 반영되어 우리의 국가이념이 민족주의, 민주주의, 평화주의 등을 지향하는 의미의 것으로 명시되었다. 그 이후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합하고 조화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교육이념에 반영되어 오늘에 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다.<sup>5)</sup>

4) 박용헌, 『민주화 세계화와 교육과제』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6), p. 242.

5)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은 2005년 11월 8일 일부 개정된 교육기본법 (법률7685호)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요컨대 우리의 교육이념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조화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과 신념으로 정립되었으며, 이는 교육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홍익인간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켜보면, 자아 및 공동체적 정체성 확립, 인간존중과 자아실현의 가치구현, 다원성의 존중, 공동선과 정의 실현, 인류애와 평화애호정신 함양 등을 상위 교육목표로 설정해 볼 수 있다.<sup>6)</sup>

여기에 제시된 가치들은 결국 헌법에 명시된 민족주의·자유민주주의·복지주의·세계평화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인간형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이 곧 남한 정치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하겠다.

## 2. 남한 정치교육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우리의 정치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익인간’이라는 구호 아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따른 인간형성에 그 목적이 있으나, 이러한 목적은 각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다소 달라지기도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교육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통치가 끝나고 맞는 해방은 우리의 희망과 달리 미소 양국이 한반도를 나누어 점령하였다. 먼저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였고, 뒤늦게 진주한 미군은 3년간 군정을 실시하였다. 당시 한국에 진주한 미군은 한국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었고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한국에서의 미군정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보루를 구축하고”, 2차적 목적은 “남한지역을 민주화시킬 것”이라는 지시만 받고 왔다. 즉 한국에 진주한 미군의 최대 관심사는 소련의 세력팽창을 저지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일, 즉 자유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sup>7)</sup> 따라서 미군정하에 남한의 교육정책도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군정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 한국민족의 자주성이나 독립성 보다는 한반도에서의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친미적 민주주의 국가수립을 우선시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미국식 교육방법과 이론을 도입하여 정착시키는데 있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사회과의 도입이다.<sup>8)</sup>

미 군정청 하에서 발간된 사회과 교과서 중 6학년용 「우리나라의 발달」은 우리

---

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박용현, 앞의 책(1996), pp. 258-263.

7) Bruce Cumming 외, 박의경역, 『韓國戰爭과 韓美關係』(서울: 청사, 1987), p. 19.

8) 鄭朱玟, 「美軍政期 社會生活科(Social studies)의 導入過程에 관한 研究」(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28.

나라의 역사, 건전한 생활,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공통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과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에 깔려 있는 기본입장은 전통적 가치와 이념을 부정하고 미국식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우월성의 강조와 산업발달 중 특히 공업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민족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의 약화를 유도하는 표현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sup>9)</sup>

정치적 혼란기에 실시된 민주주의 교육은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은 아니었고, 교육내용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나 제도보다는 주로 민주주의의 생활원리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교사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인의 생활과 당시 우리 생활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관습들을 은연중에 비판함과 동시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미군정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한국 교육학자들은 일제 식민지 교육과 일제에 의해 온존되었던 봉건주의적 교육 잔재 일소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교육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당시 공민교과서에

나타난 가치교육도 민족주의 가치보다 민주주의 가치가 더 많았다. 그렇지만 민족·전통가치에서도 전통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면서 그 창조적 계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수한 민족·전통가치를 계승하면서 민주·근대가치를 수용하려는 의도들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초·중등 공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가치교육 내용><sup>10)</sup>

요컨대 광복이후 미군청에서 실시한 정치교육은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교육도 병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의 종식과 더불어 출범하게 된 제1공화국(이승만정권)의 정치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법에 나타나 있는 민족·전통가치와 민주·근대가치덕목들이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조화 있게 구현하려 한 우리의 교육이념이 지향하고자 한 기본적 취지는 교육법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육법에 나타난 이들 가치덕목들이 민족·전통가치와 민주·근대가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본다든지 또는 교육이념의 기본목적과 학교 급별

9) 위의 논문, p. 52; 당시 미군정청 직원인 진츠(M.Zintz)라는 미군하사관의 주선에 의해 구입된 미국의 맥밀런 출판사 발행 『민주주의 총서(Democratic Series)』 중 초·중등학교의 사회과 교과서로 채택된 「자유를 찾아서(Toward Freedom)」라는 책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10)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1946년 4, 5월에 펴낸 『초등공민(5·6학년 합병용)』과 『초등공민(하)』, 『중등공민(상, 하)』 분석자료, 박용현, 앞의 책(2002), pp. 225-226.

급별	민족·전통가치	민주·근대가치
초등	개천절, 단군임금, 화랑도, 전통문화의 우수성, 3.1운동, 한글창제, 단결, 희생, 봉사, 국기의 뜻, 민족성의 장점(문화창조의 독창성, 강인한 생명력)	자유, 권리, 인도, 책임, 의무, 정의, 인격, 존중, 준법, 규칙준수, 시간준수, 민주정치(인민의 국가, 법치정치, 대외정치), 세계평화, 국제교류, 민족성의 단점(의외심, 외면치레, 공덕심, 부족, 단결심 부족)
중등	독립국가건설, 전통문화, 민족자존, 화랑도, 한글, 우리 겨레의 사명, 국기의 뜻, 민족성의 장점(지구성, 도덕성, 문화적 독창성, 集合力)	자유, 책임, 인도주의, 정의, 규칙준수, 공덕, 자치, 국제주의, 호상신애, 이상, 국제교류, 세계평화, 민주정치(인민의 국가, 대외정치, 법치정치), 민족성의 결점(질서 및 조직성 부족, 천박한 낙천성, 외면치레, 의외심, 이상을 향한 열정 부족)

교육목표들에 담겨 있는 가치덕목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따져 본다면 그 회답이 궁색해 질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민족·민주가치 체계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연구수준과 이해 수준을 감안하여 이해하려 한다면, 민족·민주가치의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지 않고 두 가치를 조화 있게 구현하여 한 신념과 의지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11)</sup>

#### <교육법에 나타난 가치교육 내용>

구분	민족·전통가치	민주·근대가치
제1조, 제2조	홍익인간, 국가자주독립, 애국애족, 국가발전,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봉사, 협동, 신의, 경애, 근검노작, 심미성	자주적 생활능력, 공민(민주시민)의 자질, 인격, 과학, 탐구, 창의, 합리, 자유, 책임, 무실역행
제94조, 제101조	도의심, 독립자존, 민족진통, 민족의식, 근로역행, 협동, 명량, 심미성	개성, 자율, 공정, 진로탐색, 자립, 책임, 공덕심, 국제협력

하지만 이러한 교육법에 나타난 가치교육과 현실은 많은 괴리를 보였다. 건국초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과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낮은 의식수준 등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은 규범적, 이념적 구호에 가까웠다고 보아

11) 박용현, 앞의 책(2002), pp. 227-228.

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건국 후 얼마 뒤에 일어난 6.25전쟁은 정치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승만정권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와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교육과 반공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반공교육을 강조하게 된 것은 전쟁으로 인해 공산당의 실상을 국민들이 피부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교육의 경향은 이승만정권 말기에 와서는 극단적으로 민주주의가 한국사회를 혼란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간주되기도 하였다. 또 학교교육에서도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도의교육을 통하여 정부에 충성하는 국민이 될 것을 역설하였다. 이는 결국 학교에서 가르쳤던 민주주의 교육과 상치되는 것으로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과 독재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신민적 교육으로 변질되었다.<sup>12)</sup>

이승만정권말기 초·중등학교를 통해 민주주의 교육을 학습한 바 있는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 특히 민주주의 이상과 그 원리에 따라 현실을 평가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현실 독재정치와의 괴리를 느낀 학생들은 급기야 이승만정권을 타도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정권은 미군정기 때부터 강조하여 가르쳐왔던 민주주의 정치교육을 학습한 학생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4.19혁명을 주도했던 당시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미군정기와 이승만정권 초기에 초, 중, 고등학교 때 민주주의를 교육받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학습한 민주주의와 현실정치, 즉 이승만 1인 독재체제와의 차이를 줄이고자 한 것이 4.19혁명이었다. 이는 통치 권력의 정당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주입한 통치이념이 다시금 통치 집단에 대항하는 대항이념으로 변형되어 갈등행위의 발생을 촉진한 것이라고 하겠다.<sup>13)</sup>

요컨대 미군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개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그대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고, 비록 현실 정치는 비민주적 파행을 계속하였으나 그때 실시한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기 위한 정치교육은 이승만정권을 타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건국초기 강조되었던 민족주의 교육과 6.25전쟁을 통한 강도 높은 반공교육은 지속적으로 맥을 이어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무튼 미군정을 비롯한 건국초기의 정치교육은 비록 체계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념적 성향이 강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에게 내면화되어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여도 좋을 것이다.

## 2) 반공교육과 충효교육

1961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

12) 손풍삼, 『한국의 정치교육과 정치발전』(서울: 연방컴, 1996), pp. 141-142.

13) 李海成, 『統治體制의 矛盾과 學校教育』(서울: 청아, 1988), p. 131.

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정권의 기본 성격을 분명히 했다. 또 ‘국가 자주경제’의 달성과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을 국정수행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sup>14)</sup>

군사정권은 혁명의 6대 공약에 따라 5월 26일 ① 간첩침략의 분쇄, ② 인간개조, ③ 빈곤타파, ④ 문화혁신 등 4개 항목의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나아가 광범위한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간첩침략의 분쇄는 반공 및 국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용공 및 중립주의의 배격, 교과학습, 특별강좌, 시국강연 등을 철저히 할 것과 정치활동 엄금 및 강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인간개조는 정신혁명을 뜻하는 것으로 도의교육의 강화를 비롯하여 국민 신생활 운동 전개, 민주주의 수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의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빈곤타파는 생산 기술교육 및 실업교육의 강화와 향토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었고, 문화혁신은 신민족 문화창달을 통한 민족문화 양양, 건설적인 문화예술 운동, 외국문화 수입 태세확립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그 전부터 강조되어 오던 것이어서 목표로 제시된 항목의 표현이 강한 만큼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군사정권은 당시 사회의 모든 구악과 부패를 일소하고 퇴패한 국민도의를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국민운동의 선봉적인 역할을 다짐하고 나섰다. 여기에 인간개조의 혁명과업 완수의 기본적인 목표가 수립되었고, 또 이에 따라 문교행정의 기본방향도 인간개조를 제시하게 되었다.<sup>15)</sup>

이렇게 군정을 거쳐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국가의 기본목표를 자주 국가건설과 경제개발에 두었다. 이러한 국가목표로 인하여 교육정책도 자주 국가건설을 위한 민족문화 애호사상고취 교육이 강조되었고, 또 경제건설을 위한 교육도 아울러 강조되었다. 민족문화애호사상 고취를 위한 교육에서는 건전한 국민도의의 확립(자주 자립정신의 확립, 승공도의를 양양, 협동 단결력의 강화), 민족주체성의 확립(자주독립정신의 함양, 반공도의 교육 강화, 단결협동정신 배양, 민족문화 애호사상 고취)을 그리고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술의 추진(건설적 창의적인 생활태도의 육성, 생산기술의 연마, 합리적 경제생활의 실천)에 역점을 주었다.

박정희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수천년 동안 가난에 젖어온 국민들의 잠재의식을 깨우치는 일종의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70년 초중반부터는 남북한 체제

14)文昌周, 『韓國政治論』(서울: 博英社, 1975), p. 234.

15) 손풍삼, 앞의 책, pp.164-165.

경쟁에서 우리가 북한을 앞지르게 되었다.

한편 박정희정권은 경제건설의 부작용으로 인한 황금만능주의, 사치와 낭비풍조, 공무원의 부정부패, 타락된 윤리관 등 일부 사회적 부작용을 의식하여 「제2의 경제」 건설을 역설하였다. 또한 당시 경제건설 치중으로 인한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교육이념 부재현상을 지적하여, 하루속히 한국교육이념 정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만든 것이 1968년 12월 5일 제정한 「국민교육헌장」이다.<sup>16)</sup> 국민교육헌장은 우리 교육의 이념을 민족 민족중흥에 초점을 두고, 조국 근대화와 주체성 확립, 반공정신의 투철화에 두었다.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 학생, 공무원들에게 국민교육헌장 전문을 암송토록 하였고, 필요한 곳에 게시하고 행사 때에는 이를 반드시 낭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72년 전격 단행한 10월 유신 이후의 정치교육은 주로 민족주체성, 민족사관, 충효교육, 안보교육, 국가관 확립, 조국근대화, 한국적 민주주의 등을 주요 이념으로 표방하여 유신체제의 정당화와 합리화하는데 이용되었다.<sup>17)</sup> 특히 그 중에서도 역점을 둔 정치교육은 정권에 순종하게 하는 일종의 「충효교육」이었다. 전통 유교사상에서 중시되어 왔던 충효교육을 유신정권 하에서 강조한 것은 무엇보다도 효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권위 질서체제를 국민들에게 내면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정권의 이 같은 교육적 노력으로 인해 효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다.<sup>18)</sup> 그러나 박정희정권이 이렇게 충효를 강조하는 것은 건전 비판을 통한 국민통합보다는 독재정권에 충성하게 하여 유신정권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충효교육은 단순한 도덕교육 차원이 아니라 독재정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정치교육적 성격이 강했다.<sup>19)</sup>

요컨대 박정희시대에 강조되었던 새마을교육도 출범초기와는 달리 순수성을 잃고 지나치게 반공중심의 교과과정으로 개편되었고, 한국적 민주주의교육은 민주주의의 보편성보다는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여 유신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유신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적민주주의」는 정부의 강압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조차도 교과내용을 충실히 다루기보다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교과내용을 외면하여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되자 박대통령 말기에 시도된 정치교육은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역효과만 가져왔고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만 증폭시켰다.<sup>20)</sup>

16) 中央大學校, 앞의 책, pp. 350-360.

17) 韓萬桔, “教科課程과 國家의 社會統制,” 『교육개발』 (제8권 제4호), pp. 88-89.

18) 박용현, 앞의 책(2002), pp. 300-302.

19) 韓國教育開發院, 『韓國教育政策의 理念(2)』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6), pp. 90-94.

### 3) 국민정신교육과 이데올로기비판교육

제5공화국 정부는 출범 초기(1980)에 이미 헌법의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이라는 4대 국정지표를 설정 제시하고, 그 중 교육혁신을 전인 교육, 정신교육, 과학교육, 평생교육 등 4개 영역의 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신교육 개혁은 먼저 사회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주로 부패추방운동과 국민의식개혁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고자 하였다.<sup>21)</sup>

또한 종전까지 실시해 온 반공교육, 도덕교육, 국민윤리교육, 새마을 교육, 의식개혁운동, 이념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등 다양한 명칭의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교육을 국민정신교육으로 종합화·체계화를 시도하였다.<sup>22)</sup> 국민정신교육에서 다룬 주요내용은 헌법에 명시된 민족·민주·정의·복지의 국가이념과 교육법에 명시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토대로 하여 첫째 민족·국가공동체 의식과 애국애족 정신의 함양, 둘째 국력신장 의지와 진취적 기상의 고취, 셋째 민주국민의 자질과 능력의 함양 등이었다.<sup>23)</sup>

제5공화국은 당시 대학가 일가에서 좌경사상 내지 급진사상이 확산되고 학생운동이 과격화되어 가자 이를 우려하여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의 주도 하에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추진하려 하였다.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란 현실을 왜곡하는 개념이나 이론으로써 대학생은 물론 국민대중의 의식구조나 사상 성향을 잘못 오도할 우려가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적 안목을 갖게 하고자 시도된 교육이었다. 당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들은 종속이론, 해방신학, 네오마르크시즘과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부각하여 비교하는 내용 등이었다.<sup>24)</sup> 이렇게 실시된 제5공화국 정치교육의 특징은 국가의식, 민족의식, 민주주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함양보다는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의 함양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었다. 또한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직접적 강조나 실천적 덕목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한 간접적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전두환정권이 공산주의 비판을 통해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은 정권출범 초기에 남북관계 긴장이 계속되었고, 특히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이른바 학생운동권의 이념이 체제 변혁적 성향을 띠면서 과격행동이 잦아 정치적 불안

20) 裴燦福, 『南北韓의 政治社會化』(서울: 法文社, 1989), pp. 105-106

21) 조영재, 『사회정화 운동과 국가발전』(서울: 흥진서적, 1986), pp. 17-20.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민정신교육총람』(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p. 11-13.

23) 위의 책, pp. 13-14.

24) 서울대학교 현대사회사상연구회 편, 『이데올로기와 사회변동』(서울: 서울대출판부, 1986) 참조.

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sup>25)</sup>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출범하였다는 생태적 약점을 안고 있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은 정권에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정치교육도 민족주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보다는 북한 공산체제와의 체제경쟁에서 정권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정권에 도전하는 반정부 세력을 방어하는 이데올로기비판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결국 제5공화국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치교육을 체계화·조직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정통성 결여라는 정권의 약점을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 4) 민주시민교육과 도덕교육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화라는 표어를 내걸고 출범한 제6공화국은 4대 시정방침인 민족자존, 균형발전, 민주화합, 통일번영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시정방침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도 민주화와 자율화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sup>26)</sup> 당시 노태우정권은 해방이후 오래 동안 민주주의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생활양식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적 제도의 운영에 대한 불신감만 팽배하였다고 보았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무절제한 욕구의 분출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고조되어 기본적인 사회규범이 와해되고 일탈행위가 표출되는 등 사회문제가 끊이질 않아, 이러한 현실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생활윤리에 대한 경험을 축적케 하고 지방화·개방화 시대에 걸 맞는 민주시민교육과 도덕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었다.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의 내면화,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의 숙달을 통해 21세기 주역으로서의 민주시민상을 구현하며, 전인교육을 통해 민주적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민주시민 의식과 가치관 및 태도를 육성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교사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며, 둘째 학교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자질 함양 교육 활동을 내실화하며, 셋째 교육내용을 보완하고, 넷째 민주적 생활훈련을 강화하는 등 교육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sup>27)</sup>

그러나 노정권은 5. 18에 관한 끊임없는 시비와 미온적인 5공 척결 등에 대한 대학생들과 재야의 저항이 끊이질 않아 사회적 불안정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25) 자세한 내용은 조희연, “80年代 民主化運動과 體制論爭,” 강광식의, 『現代 韓國體制論爭史 研究』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참조.

26) 『第6共和國 實錄4』 (서울: 공보처, 1992), pp. 38-40.

27) 교육부, 『교육월보』, 1991년 12월호, pp. 24-25.

해결하고자 한때 국무총리실에 이념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제5조정관실)를 두었으나 전두환정권 때의 정치교육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등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한편 한국병 치유를 위한 「신한국건설」을 내세우며 제6공화국에 이어 등장한 김영삼정권은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 정권임을 내세워 대대적인 사정과 부정부패 일소를 주장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제, 금융실명제 등 과감한 개혁정책을 수행하여 출범 초기 국민들의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sup>28)</sup> 여기에 힘입어 이른바 '5.18 광주사태'와 '12. 12사태'를 잘못된 역사라고 규정하고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을 주장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수감하는 등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한보사건 등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정국이 혼돈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IMF 경제위기로 좌초하는 정권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문민정부가 주창하던 「신한국 건설」과 「역사바로세우기운동」도 호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노태우·김영삼정권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사회적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도기 정권으로 민주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 정치교육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건국50년을 맞이하여 「제2의 건국」이라는 거창한 구호아래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약칭 제2건국위)」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별 실효성 없이 끝나고 말았다.<sup>29)</sup> 결국 김대중정권은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으나 정치교육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노무현정권은 그동안의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구호아래 사회 각 분야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하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비하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노정권이 정치교육에 관심을 두고 않았던 것은 과거 정치교육이 정권유지에 이용되었다고 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왜곡된 과거 역사를 바로 잡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요컨대, 남한 정치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하에 민주주의 가치와 민족주의를 내면화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개인과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성이 사회문화 체계에 반영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sup>30)</sup> 비록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굴절되는 인간형이 요구되기도 하였으나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교육내용은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28) 『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이다』(서울: 동광출판사, 1994), pp. 15-49.

29) 「조선일보」, 1998. 9. 20.

30) 전숙자, “북한교육에 나타난 인간관”, 『남북한 사회통합』(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85.

## IV. 북한 정치교육의 목적과 내용

### 1. 북한 정치교육의 목적

공산주의는 교육은 정치에 종속된다고 보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물론 과거의 모든 교육이 지배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가 계급을 위한 자본주의 교육을 비판하였고, 나아가 그들에 의해 노동계급 요구에 맞는 공산주의 교육이론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교육은 철저히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목표는 공산주의적인 인간형성, 즉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적 투사를 길러내는데 있다.<sup>1)</sup>

과거 착취계급 사회에 복무한 노예적, 봉건적, 자본주의적 교육이론과 교육방법은 그 모두가 착취제도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어느 것도 사람들을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힘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사회 앞에서 무기력하고 인격의 전면적 발전이 심히 억제된 노예적 인간, 기형적 인간을 만들어 통치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합리화하는데 이용되었다.

맑스주의의 발생은 교육이론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으며 노동계급의 과학적 교육이론의 시초로 되었다. 맑스, 엥겔스에 의하여 자본주의교육이론이 비판되었으며 교육에 대한 노동계급의 요구로서의 공산주의교육정책에 대한 일련의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레닌은 맑스, 엥겔스의 교육이론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정권을 잡은 후 노동계급이 실시하여야 할 교육정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다.<sup>2)</sup>

1945년 분단이후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1948년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 3년간 소련의 군정을 받았다. 소련 군정기하 북한교육의 목적은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이었으며, 여기서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이란 소련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었다.<sup>3)</sup> 당시 실시한 교과 과정에는 ‘인민’, ‘사회과학’,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정치교양을 위한 특수과목이 설치되었고, 특히 사회교육기관에서 소련의 국가이념과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사회주의 정치교육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sup>4)</sup>

김일성은 정권수립이후에도 한동안 소련의 공산주의의 교육제도와 원리에 따라 학제와 교육행정, 교육이념도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기본노선과 내용을 그대로

1) 최준영, 「북한소학교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 분석연구」(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18.

2)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2.

3) 신호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pp. 278-279.

4) 위의 책, pp. 281-283.

도입하였다. 1961년 김일성은 7개년 경제개혁(1961-67)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sup>5)</sup>

- 1) 청소년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 그리고 전면적인 인격발달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한다.
- 2) 교육은 생산노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진행시킨다.
- 3) 기술교육을 강화한다.
- 4) 중등과정에서의 직업기술 교육은 공장대학의 확충으로 그 수준을 높인다.
- 5)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성인교육 기관을 확충한다.
- 6) 문학과 예술교육은 천리마운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인민들을 교육시킨다.
- 7) 공산당은 당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에 걸쳐서 지도 감독자의 교육을 강화한다.

또 1961년 9월 김일성이 제4차 당 대회 보고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육이론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회건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듯이, 북한의 교육학은 1960년대까지도 소련의 교육학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왔다.<sup>6)</sup> 그러다가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자신들의 교육제도를 가리켜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이론을 철저히 구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회주의 교육학이 더욱 완성되었으며, 학교교육 사업에서 주체와 노동계급의 선(線)이 똑바로 서고 교육이 과학이론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라며 ‘우리의 사회주의적 교육학’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위상과 함께 학교교육의 성격을 새롭게 천명하였다.<sup>7)</sup>

1972년에 북한헌법 제39조(1998년 개정헌법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며,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다방면으로 발전된 인성’이니 ‘새로운형의 인간상’이란 용어가 교육목적과 내용으로 중심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방면으로 발전된 인성’이란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을 뜻한다고 서구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은 당이 요구하는 어떠한 임무에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소유자를 뜻하며, 특히 생산노동에 있어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지식을 구비한 사람을 뜻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인간형’이란,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당원의 자격과 이상적인 인간상을 내세운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 김동규, 『사회주의교육학』 (서울: 주류, 1988), pp. 392-393.

6) 위의 책, pp. 387-388.

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로동신문」, 1970년 11월 3일자, 국제문제연구소, 『공산권 자료』 (1970. 12, 상권), p. 27 재인용.

- 1)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투사
- 2) 혁명전통의 계승발전
- 3) 당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 4) 혁명적 학습기풍 확립
- 5) 혁명적 군중노선 관철
- 6) 노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모범
- 7) 공산주의적 도덕성과 품성소유
- 8) 사회주의 조국의 튼튼한 보위
- 9) 혁명규율과 질서 준수
- 10) 생활총화와 사상투쟁을 통한 단련
- 11) 사업과 생활문제 당 조직에 보고

이러한 교육목표에는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이나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증오심의 고조를 통한 애국심의 발로, 노동자와 농민계급에 의한 공산주의 계급혁명 정신의 함양 등이 주요목표로 설정되어 있다.<sup>8)</sup> 또 1977년 9월 5일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서문에서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 하여야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공산주의 새인간 양성을 위한 사상개조를 주장하였다.

북한이 1999년 제정 공포한 교육법 제3조에도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 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sup>9)</sup>라며, 지·덕·체를 고루 갖춘 공산주의 인간교육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는 사회주의 교육학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산주의 건설에 필요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체제로 전환되어 가면서 교육의 목적도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인간형’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주체사상에 입각한 인간형은 어떠한 인간형을 말하는가?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대담에서 “주체사상교양은 우리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입니다.<sup>10)</sup>”라며, 주체사상교양은 ‘주체형 공산주의혁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임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주체사상 교양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상교양’이라며,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주체사상

8) 김동규, 앞의 책, pp. 393-394.

9) 한국교육개발원, 『북한교육관계법령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p. 174.

10) 『김정일선집(제8권)』, p. 432.

을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 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며, 주체사상의 교양을 통해 수령에게 충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로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sup>11)</sup>”라며 주체사상 교양의 근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 교양에는 당 정책교양과 혁명전통 교양,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 도덕교양 등이 포함되며, “당에는 주체사상체계 밖의 다른 사상체계가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체계가 필요 없으며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교양 교양이 있을 수 없다.”<sup>12)</sup>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북한의 정치교육은 보편적 사회주의 교육에서 주체사상 및 유일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체교육’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인간형이 인민과 집단을 위해 공산주의에 헌신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면, 주체형 인간은 인민과 당과 수령은 하나라는 논리에 의해 ‘수령에 충실한 혁명전사’를 키우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북한이 위기상황이 고조되면서 ‘김일성·김정일의 충성동기와 효자동이’,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한 인간형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주체형의 인간이란 ‘공산주의 건설자’라는 보편적 의미보다는 북한의 유일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목적으로 체제유지와 재생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김정일체제의 수호자’를 뜻하는 것이다.<sup>13)</sup>

## 2. 북한 정치교육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 각자의 자아실현과 공동선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내용 또한 자유와 평등, 정의, 합리적 절차, 다양성, 참여, 책임과 의무 등의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인간의 경제적 평등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주의 교육은 우리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마르크스이론에 토대를 공산주의 교육학은 주로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그리

11) 『조선대백과사전 19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344.

12) 위의 책, pp. 343-344.

13) 신호숙, “교육제도의 형식과 내용: 사회주의 인간형에서 주체형 인간양성으로,” 박호성·홍원표, 『북한사회의 이해』(서울: 인간사랑, 2002), p. 238; 신호숙, “북한교육 연구의 성격과 과제,” 『통일정책연구(15권 1호)』(통일연구원, 2006), p. 143.

고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 실천되어 왔으나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를 견지하고 있다.<sup>14)</sup>

## 1)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 증오사상의 고취원리

마르크스는 그가 쓴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와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하고 있다. 즉 소수의 자본가계급이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한다고 보고 자본가 계급과 권력자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강렬히 비판하였다. 마르크스의 증오심과 복수심은 1837년에 쓴 <희곡>에는 “신의 세계가 다 없어지더라도 복수만은 남는다.”, “높이 군림한 저 자에게 당당코 복수하련다.” 등이 나타나고, 1843년의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는 “철학이 프롤레타리아에서 그 물질적 무기를 발견하듯이 프롤레타리아는 철학 속에서 그 정신적 무기를 발견한다.”, “종교는 아편이다, 싸움이다.”라고 쓰고 있다. 또 <공산당선언(1848)>에는 “지배계급이여 공산주의 혁명 앞에 전율하라!”,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에 의하여 잃은 것은 쇠사슬이요 얻은 것을 세계다.”라며 적대적 계급에 대해 증오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 정치사상교육의 강화

교육이란 원래 학문적인 원리와 법칙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지적영역과 가치관을 결부시키는 정의적(情意的) 영역의 교육으로 대별되지만 사회주의 교육학에서는 지적영역보다는 정의적 영역의 가치교육, 즉 정치이념교육과 밀착된 학교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어떤 면에서 사회주의 교육은 사회주의의 정치적 이념을 강화시키는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정치이념교육의 주 내용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몰락하고 사회주의에로 진보한다는 변증법적 유물사관과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는 프롤레타리아혁명론, 그리고 사유재산제도는 철폐되고 만인이 평등한 계급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이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집단주의의 원리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여 상호경쟁을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리로 삼고 있다면, 공산주의 사회의 가치관은 전체적인 평등을 지표로 삼고, 상호협동으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경제기본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성과 평등성에는 집단주의 정신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교육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협동을 원칙으로 하는 집단주의의 원리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소련의 교육학자 마카렌코는 집단주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4) 김동규, 앞의 책, pp. 14-28 참조.

어린이들에게는 군대화가 정말 멋있게 보이고, 용어도 군대식인 「대장」이라고 부르게 하고 조직적 책임분담제가 좋으며, 항상 보고하게 하고 복장도 제복을 입혀야 하고 집단 체조, 규칙적인 집회가 필요하다. 또는 아동들로 구성된 집단력은 강대하나 붕괴되기 쉬운 약점도 지니고 있다. 자체 내부의 잘못이 개재되어 있다거나 지도력이 모자라 일관성이 없을 때에는 집단체가 오합지졸의 군중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 그래서 집단 정신에는 뚜렷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의 주입과 규율이 요구되는 것이다.<sup>15)</sup>

### 조기교육과 이론과 실천의 통일 원리

교육학에서 초기 사회화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특별히 공산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교육학에서 강조된 조기교육론은 결국 가정교육 또는 취학 전 교육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소련의 경우 1918년 1월에 있었던 <교육인민위원회 의사와 보건부의 성명>에서는, “어린이는 우리의 장래이다. 우리들은 어린이들의 손에 인류를 위한 투쟁임무를 떠 넘겨야 한다.”라는 내용으로써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련의 유명한 교육학자 마카렌코는 “출생부터 5세까지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여 일생교육의 90%는 여기서 결정된다.”(<부모의 자녀교육을 위하여>)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렇게 공산주의사회가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부녀자들을 가정으로부터 사회로 동원시켜 집단노동에 참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유와, 또한 집단주의 정신을 통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주입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보다 효과적이라는 학습심리적인 원인에서라 하겠다.<sup>16)</sup>

사회주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배운 이론적 지식습득을 반드시 실천적인 노동과 결합하도록 하고 있다.

###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의 원리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조직체의 목표나 활동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자기반성으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자아비판 없이는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며, 집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끊임없는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원리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비판과 자아비판의 원리는 상호 감시하고 비판하게 함으로써 당과 국가에 충성심을 유발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 2) 북한정치교육의 주요내용

새로운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체제에 부합되는 인

15) 마카렌코, 『집단주의와 교육학』, 김동규, 앞의 책, p. 24 재인용.

16) 신호숙, 앞의 논문(2006), p. 146.

간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과거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정치교육이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으며, 학생들을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sup>17)</sup>라며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일성의 이러한 생각은 북한 교육법 제29조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라며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김일성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사업인 동시에 장기성을 띠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이러한 지침에 따라 북한의 정치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며 학급이 올라 갈수록 보다 구체적·체계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북한은 다른 국가와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 정권이 교체된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일관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인격함양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sup>19)</sup> 북한체제와 김일성·김정일에게 절대 충성하는 인간, 즉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북한의 정치교육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일성유일사상체계 확립 강조

일반적으로 모든 공산주의 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를 둔 하나의 공식 또는 관제적 통치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체제 성원 모두가 지지하도록 강요된 통치이데올로기는 사회체제의 모든 영역을 통제한다. 그것은 체제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결정해 주는 지도이념으로서,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변화시켜 가는 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체제 성원 모두의 행위규범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의 선악을 가려주는 종교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렇듯 공산주의 체제의 경우, 다른 자유주의체제와는 달리 생존과 발전을 지향함에 있어서 통치이데올로기의 비중은 지대한 것이다.<sup>20)</sup>

북한은 정권초기에 통치이데올로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을 채택하였으나,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그에 의해서 주체사상을 절대화·관념론화하는 일환

17) 김일성, “전반적으로 11년제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30』, pp. 247-248.

18) 김일성,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1』, pp. 81-82.

19) 임순희, 『북한청소년의 교육권: 실태와 변화』 (통일연구원, 2005), pp. 16-17.

20) 梁好民,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의 확립,” 李相禹외, 앞의 책, pp. 64-65.

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강조하고,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격상시켰다.<sup>21)</sup> 이와 같이, 북한은 절대 권력자인 수령(김정일)을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재되어 있고,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유일체제이다.<sup>22)</sup>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당과 전체 사회의 유일사상으로 확립한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상체계의 전 면모는 김일성과 그의 사상에 대한 절대 충실성을 규정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10대원칙>은 김정일이 1974년 4월에 발표한 것으로 ①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할 것, ② 김일성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 것, ③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할 것, ④ 김일성의 교시를 신조화할 것, ⑤ 김일성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 ⑥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할 것, ⑦ 김일성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품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할 것, ⑧ 김일성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김일성에게 충성으로 보답할 것, ⑨ 김일성의 유일영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 같은 규율을 세울 것, ⑩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갈 것 등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지침과 같은 10계명과 매우 유사하다.<sup>23)</sup>

북한 또 이 시기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목표로 유일사상과 주체사상 무장을 강화하였다. ‘주체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 취학 전 아동기부터 주체사상을 학습시킨다. 탁아소에서 말을 알아듣고 배우기 시작하는 만 2세 정도에 이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일성 원수님 감사합니다.”를 따라 반복시킨다. 또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물품은 수령과 당이 베푸는 것으로 교육하고 식사나 간식시간에는 김일성에게 감사하다고 복창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교육을 통하여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가 김일성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점을 주입시킴으로써 김일성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심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킨다.<sup>24)</sup>

소학교<sup>25)</sup>에서는 주체사상의 내용이 단원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이 축지법, 축시법 등을 쓴다는 등 이상화 학습을 하고 있다.<sup>26)</sup> 그리고 중학교에서부터

21) 위의 논문, p. 64.

22)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210.

23) 이종석, 위의 책, p. 211; 탈북자(새터민)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에 나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너무 흡사해서 놀란다. 조용관·김병로, 『북한 한걸음 다가서기』(고양: 예수전도단), p. 152.

24) 金炳魯,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35.

25) 북한은 2002년 9월부터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개칭하였다.

26) 주체 91년 교육도서출판사 발행 국어 교과서(리광섭·서재필 외, 2001, 138-139) <제58과 남녘땅의 새진설>에는 “김일성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은 시간을 주름잡는 축시법을 쓰신데”라며 김부자를 이상화하고 있다. 김동규, “북한의 소·중학교 교과내용에서의 남북통일 관련 학습단원 내용의

는 주체사상에 대해 이론적인 기초학습이 시작된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사상, 이론,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주체사상이론을 학습한다.<sup>27)</sup>

북한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위고하와 남녀노소를 등급별, 조직별로 나누어 김부자의 교시와 말씀학습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인민을 하나의 사상, 즉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무장화된 참 공산주의 혁명가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8)</sup>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은 20세기 70년대에 이미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는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sup>29)</sup>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0)</sup>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철학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불멸의 철학이며, 김정일이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켰다며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있다.

김일성의 주체철학은 우리 혁명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철학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우리시대의 노동계급의 불멸의 철학이며 인류의 철학발전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 철학이다.<sup>31)</sup>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서 주체의 사회 역사관 이전의 사회역사관들은 물질이 1차적이나 의식이 1차적이나 하는 철학적 논쟁의 필연적 연장으로서 인류 역사를 객관주의적으로 혹은 주관주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지난 시기 사회역사관의 이 같은 한계성이 극복되고 역사발전에서 민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밝힌 사람 중심의 새로운 사회 역사관이 출현하게 됐습니다.<sup>32)</sup>

나아가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표현은 최고의 존칭과 고

---

분석과 평가,” 『서울평양학보 (제3집 1호)』 (서울평양학회, 2004), p. 151 재인용.

27) 金炳魯, 앞의 책, pp. 41-42.

28) 金亨植, 「金日成과 金正日의 體制維持 政策에 관한 比較」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82-83.

29) 량룡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계승발전시킨 위대한 혁명사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철학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p. 54.

30) 김국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발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 강령,” 『근로자』, 1991년 제6호, p. 33.

31)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록,” 『철학강좌』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p. 9.

32) “김일성주의 강좌; 사회역사에 대한 고찰,” 『민민전방송』, 2002. 3. 21.

덕활자를 사용이다. 예컨대 사진 화보설명을 담은 아트지 지면에서 김일성 석자는 반드시 고딕 활자로 표기하여 신성시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시었다. 우리가 얻은 가장 귀중한 성과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강철 같은 불패의 대오로 더욱 단련 강화하였다는 것이다.<sup>33)</sup>

북한에서 발간되는 각종 서적이나 신문, 심지어 학술논문까지도 반드시 김일성·김정일의 어록이 들어가며, 김부자의 이름 앞에는 몇 줄에 한번씩 ‘위대한 수령’, ‘경애하는 수령’, ‘친애하는 지도자’ 등의 수식어가 삽입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당들의 투쟁경험을 조선의 실정과 결부하여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당원들에게 불어넣는 경향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9권, 260페이지)<sup>34)</sup>

《수령님께서서는 조상전래의 인정과 성량성, 미덕을 조선민족의 자랑으로 여기시고 우리 인민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인덕의 정치를 베푸시었습니다》……문무충효를 겸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인덕의 정치를 베푸시고 계신다.<sup>35)</sup>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이러한 표기 관행은 왕조시대에 왕이나 중국 황제의 이름을 휘(諱) 하던 습관, 왕이나 왕명과 관계되는 기사가 나올 때 반드시 상단일자(上段一字)를 떼어 쓰던 지식인들의 습관을 연상시킨다. 수령은 보통의 인간이 아닌, 과거의 왕에 준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관념이 이러한 독특한 표기방식을 낳았다고 본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김일성 우상화작업이 어느 정도 정착된 197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자주 사용되고 있다.<sup>36)</sup>

심지어 북한에서 발간한 『철학사전』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해석권을 김일성 1인이 독점할 정도로 소비니즘화되고 1인 독점화되어 있다. 그 증거로 사전 권두에 ‘김일성의 생애와 사상’ 해설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저작명이나 연설 제목을 모조리 ‘올림말’로 망라했고, 어휘 해설은 모두 김일성의 연설에서 인용하고 그 인용 부분은 특별히 고딕활자로 강조하는 있는 점이다.<sup>37)</sup>

33) 『고난의 행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p. 270.

34)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439.

35) 『로동신문』, 1993. 1. 28.

36) 崔載賢, “北韓社會理念속의 傳統的要素,” 『亞細亞 傳統社會에 미친 共產主義의 影響』(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국립정치대학국제관계연구중심, 1987), p. 7; 또 이러한 표현 양식은 기독교 문헌들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37)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연구』(서울: 나남, 1993), p. 78.

북한은 또 김정일이 1982년 김일성 탄생 70돌 기념으로 북한의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는 그동안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해석권을 김일성의 1인 독점하였으나, 김정일의 논문 발표이후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한 독점권이 김정일에게 세습된 것을 뜻한다.<sup>38)</sup>

이와 같이, 북한의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의 하위 사상에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치달아 그것을 대체하는 지도사상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특히 사상 해석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한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서 이론화, 체계화의 길을 밟아 왔다. 이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에서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 와서는 현실을 규정하는 사상이론으로까지 격상되었다.<sup>39)</sup> 또한 김정일이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게 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교조화·절대화된 통치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우상화 교육 강화

어떤 한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다른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수용을 하지 않으면 폐쇄적으로 되어 교조화되거나 우상화되기 쉽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은 북한의 김일성유일사상체계는 곧바로 김일성·김정일부자의 우상화와 가계의 우상화로 발전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우상화 학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시도하고 있는 김일성 부자와 가계의 우상화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김정일은 먼저 자신들의 가계를 우상화하였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증조부로 부터 조부, 부모, 외가, 모두를 우리나라 근대혁명운동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자’, ‘혁명가’ 등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가계 전체를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sup>40)</sup>으로 기술하면서 우상화하고 있다.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를 고종 3년(1866년)에 미국상선 제너럴 셔어만(General Sherman)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 이르러 통상을 요구하다가, 평양 군민들로부터 화공을 당하여 불타 소멸되었을 때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미국해적선 《사만》호를 소탕하기 위한 투쟁에서 김응우선생님은 실로 우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이 싸움마당에 떨쳐나선 인민들은 무비의 영웅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sup>41)</sup>

38) 위의 책, p. 42.

39) 이종석, 앞의 책, pp. 182-183.

4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

41) 박득준편집 『근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p. 18-19.

그밖에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1894-1926)을 ‘민족해방운동’의 선각자, 탁월한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으며, 그의 숙부인 김형권과 더불어 ‘1917년 당시 최대의 반일지하조직’이라고 날조된 <조선국민회>를 주도, 3.1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동북만주에서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sup>42)</sup> 또한 김일성의 모 강반석은 ‘혁명가의 아내’로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전환기에 부 김형직과 함께 각종 항일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김일성을 낳고 키운 조선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특히 1926년에 그녀가 반일(反日)부녀회를 조직하는 등 공산주의 여성운동의 기원을 열어 놓았다고 선전하고 있다<sup>43)</sup>.

두 번째, 김일성·김정일은 자신들 스스로를 우상화·신격화하고 있다. 김일성은 태어날 때부터 별인들과는 달리 큰 별이 나타났으며<sup>44)</sup>, 어릴 때부터 애국심이 출중할 뿐 아니라 백두산 인근에서 항일빨치산운동을 할 때에는 신처럼 활동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 정기를 타고나시고 하늘의 별을 부리시는 분이시기에 천지조화를 다 알고 계신대.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치실 때는 장군별을 하늘에 띄워 놓으시고 적들을 몽땅 골짜기에 몰아넣고 잡으시기도 하고 구름을 타고 적진에 들어가서 놈들과 싸워서 죽게도 하신다구 그러더라. 그리고 뭐 도망치는 놈들은 길을 잃고 제자리에서 헤매다가 돌로 굳어져 죽게도 만드신대.<sup>45)</sup>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4월 15일을 민족의 최대 명절로 정하고 이를 <태양절>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민족 중 오직 북한만이 태양절을 모시게 되어 큰 은혜라고 김일성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묘사하는 등 김일성 우상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오늘은 4월15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4월의 봄명절,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한 이 아침, 인민의 마음은 아버지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성지로 달려갑니다... 태양절은 주체의 태양을 모신 나라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인류의 태양을 받드는 인민만이 전통적인 최대의 경사로 기념할 수 있는 명절입니다.<sup>46)</sup>

태양절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 우리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독립되고 융성번영하게 된 김일성조선이며 우리 민족은 수령님의 손길에서 구원

42) 『백과전서(1)』(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p. 727-728.

43) 『민족의 영웅 인민의 수령 김일성원수』(평양: 노동자신문사, 1970), p. 29.

44) 북한에서 발간된 책에는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태어날 때쯤에 백두산에 큰 별이 솟았는데, 일본친황과 신하들이 이를 보고 놀랐다고 미화하고 있다. 『김일성전설집』(서울: 백수사, 1996), pp.18-19. 북한의 4.15 문학창작단은 1987년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설집인 『백두산전설집』(북한 문예출판사간행)을 발간하였다.

45) 『민족의 영웅 인민의 수령 김일성원수』, pp. 23-24.

46) “ 민족 최대의 명절 태양절”, 「중앙방송」, 1998. 4. 15 방송.

되고 존엄을 떨치게 된 **김일성** 민족이며...47)

북한은 김일성 못지않게 그의 아들인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있다.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4년 동안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과목으로 152시간을 학습하도록 되어있고, 고등중학교에서 6년 동안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112시간 및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 110시간을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국어·수학을 비롯한 거의 전 과목에 걸쳐 김정일우상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48)

아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백두산에 탄생하시었나니  
 백두산  
 거기서 조선의 별이 뜨고  
 거기서 조선의 행복  
 조선의 미래가 시작되었다.”(고등중학교 3학년 국어 제5과 『해돋이』,16쪽) 49)

특히 북한은 1996년 ‘교육과정안’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전 인민학교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고등중학교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가 개정 후 인민학교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고등중학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교과로 변경되었다. 수식어가 바뀐 것이다. 즉 ‘경애하는’ 이 ‘위대한’으로, ‘원수님’이 ‘대원수님’이라는 극존칭의 수식어가 사용된 것이다.

이는 ‘90년대 초 김정일이 공화국의 원수로 추대되고 그에 따라 김일성이 자연스럽게 대원수로 승급되었기 때문에 교과 명 역시 거기에 맞추어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김일성이 북한이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임을 직접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서 주장하는 김일성 일가의 이름 >

핵심인물 학교급 학년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비고
	1	4	7	1			
인민학교	1	4	7	1			
	2	7	9				

47) 「로동신문」. 1998. 4. 15 사설.  
 48) 『김정일우상화 사례집』 (통일원, 1992), p. 19.  
 49) 위의 책, p. 20.

	3	6	10	1	
	4	10	12		
	계	27(40.3%)	38(56.7%)	2(3.0%)	
고등중학교	1	14	15(1)		김정일을 ‘광명성’이러 언급함
	2	7	25		
	3	7	31		과외 일기(김일성2, 김정일3, 김정숙3) 명언(김일성3, 김정일17)
	4	4	21		과외읽기(김일성1, 김정일1) 명언(김정일15)
	5	9	27		과외읽기(김일성7, 김정일5) 명언(김일성10, 김정일10)
	6	8	10		
	계	48(27.9%)	124(62.1%)		
	합계	75(31.4%)	162(67.8%)	2(0.8%)	

학년별로는 소학교, 중학교 1학년과 6학년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2배미만이 등장하는 반면 나머지 학년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 이는 김정일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 비중을 두어 강조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도덕>교과서에서 김일성보다 김정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기술함으로써 김정일이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50)</sup>

또 김정일 관련 교과명도, 개정 전 인민학교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 시절>, 고등중학교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인민학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로 변경되었다.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수식어가 바뀐 것이다. 즉 ‘친애하는’이 ‘위대한’으로, ‘동지’는 ‘원수님’으로, ‘지도자’는 ‘령도자’로 개칭되었다. 이는 생전의 김일성에게 사용하던 수식어 이다.

그리고 김일성과 같은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김정일은 누구도 넘

50) 윤종진, “김정일 등장이후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변화분석,” 『통일정책연구』 (13권2호, 2004), pp. 173-174.

볼 수 없는 가장 높은 존재이며, 김정일은 생전의 김일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현재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김정일은 자신의 생모인 김정숙과 관련된 교과와 컴퓨터 과목을 신규과목으로 신설하였다. 김정숙 관련 교과를 살펴보면, 인민학교에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고등중학교에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교과이다. 이들 교과는 인민학교 전학년에서 주당 1시간, 고등중학교에는 4, 5, 6학년에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있다.<sup>51)</sup> 또 북한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을 수령복으로 간주하고 이를 찬양하고 있다.

은 거래의 염원에 받들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높이 추대되신 김정일영도자께서 계시어 이북민중은 민족사에 융성과 번영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으며 통일조국과 후손만대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를 민족자주위업의 영수로 높이 추대한 것은 우리 민족만이 받아 안은 수령복이 아닐 수 없다.<sup>52)</sup>

북한은 또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모든 곳을 혁명사적지<sup>53)</sup>로 지정하여 김일성 가계를 우상화하고 있으며, 그밖에 노동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전, 심지어 영화와 음악, 무용 등 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수령 우상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sup>54)</sup>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북한처럼 국가 원수를 우상화, 개인 숭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원래 우상이란 “참되 것이 아닌 다른 모습, 또는 중간에 게재하는 것”<sup>55)</sup>을 뜻하며, 우상화란 “우상으로 됨”, 또는 “우상적인 것으로 만듦”을 의미한다.<sup>56)</sup> 다시 말해서 우상화란 진실이 어떤 것에 장애에 의해 가리워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우상화의 극단적인 양태가 신격화이며, 이는 인간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형태를 말한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은 비범성 혹은 초인간적 우월성을 가지는 거의 절대적 존재로 신격화하여 받드는 개인숭배(cult of personality)를 하고 있다.

전근대적 봉건주의체제에서나 종교단체에서 볼 수 있는 우상화·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체제<sup>57)</sup>는 우민화정책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을 수령의 지시에 맹목적

51) 위의 논문, pp. 173-174.

52) 김남진외,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동방사, 1995), p. 36.

53) <혁명사적지>는 김일성은 물론 김정일 및 그의 가계 인물들의 혁명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것인 반면 <혁명전적지>은 <혁명사적지>의 한 형태로 주로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것을 말한다.

54) 黃長燁,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서울: 月刊朝鮮社, 2001), p. 82.

55) 『민중에센스국어사전』(서울: 민중서림, 1992), p. 1631.

56) 『원색 세계백과사전 전32권』(서울: 한국교육문화사, 1994), p. 387.

57)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는 북한사회를 현대판 봉건주의 獨裁體制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일보」, 1997. 9. 24.

으로 순종하는 신민형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sup>58)</sup> 그것도 모자라 김일성은 자기의 가계, 처, 자식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우상화하여 자신과 가계를 숭배하도록 해놓았다.

### 적대세력에 대한 증오심 고취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sup>59)</sup>라고 밝힌 것처럼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계급투쟁, 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투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적대계급인 자산계급에 대해 미움과 증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발표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잘 나타나 있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이며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확고한 노동 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노동계급의 입장에 튼튼히 서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의 원수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적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 수 없으며 참다운 혁명가가 될 수 없다. 학생들에게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계급적 원수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sup>60)</sup>

이는 결국 노동자계급과 부르주아계급간의 투쟁, 애국주의와 제국주의간의 투쟁 등 사회와 세계를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으로 간주하고, 적대적 계급에 대해서 몸 바쳐 투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도 대립되는 계급이나 국가에 대해 증오심과 복수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심리학적으로 볼 때, 조국(북한)애를 강화시키려면 상대적으로 증오의 대상을 설정하고 적대적 목표물에 대한 지독한 비판과 증오심을 갖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소속집단이나 국가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이 강화된다는 논리에서이다. 따라서 증오의 대상으로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각급학교의 각 교과목에 하나의 필수 요건으로 책정돼 있음을 보게 된다. 다음 북한에서 반미, 반남의식을 고취시키는 교과서 내용의 일부이다.

### 미제 승냥이

일제원썹놈들이 우리나라에 기여들어 주인노릇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명섭이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열한 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손을 돕기 위해 매일 산에 가서 뿔나무를 해왔습니다.  
이날도 명섭이는 제 키보다 더 큰 지게에 나무를 한짐 해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

58)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사, 1995), p. 125.

59) K.마르크스·F. 엥겔스, 김재기편역,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서울: 거름, 1988), p. 48.

60) 김동규, 앞의 책, p. 488.

니다. 명섭이가 허시몬이란 미제놈의 사과 받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우수수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새빨간 사과 한알이 툭 떨어져 울타리 밖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야, 사과!》

명섭이는 그 것으로 달려가 사과를 집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울타리 곁을 지나던 허시몬놈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놈은 말처럼 크고 사과처럼 사나운 사냥개를 풀어 놓았습니다. 사냥개는 사정없이 어리 명섭이를 물러 뜯었습니다.

명섭이는 말처럼 크고 사자처럼 사나운 사냥개를 풀어 놓았습니다. 사냥개는 사정없이 어린 명섭이를 물어뜯었습니다.

명섭이는 작대기로 사냥개를 힘껏 내리 쳤습니다. 사냥개는 주춤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허시몬놈이 명섭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놈은 명섭이를 사과나무에 꾹꾹 묶여 놓고 청강수로 이마에 《도적》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청강수 방울이 이마에 닿을 때마다 뿌직 뿌직 살이 타들어갔습니다. 명섭이는 한참동안 몸부림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이 소식을 듣고 명섭이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명섭아!》

어머니는 명섭이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상처자극에는 뺨건 피가 흘러내렸고 얼굴은 통통 부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한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제 승냥이 놈을 때려부시자!》

마을 사람들은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허시몬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제놈의 집에 숨어 있는 미제놈을 찾아내어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sup>61)</sup>

### 그날은 오리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막고 나서고 있습니다. 놈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의 대화들을 파탄시키고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정세를 계속 전쟁접경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악랄하게 탄압해 나서고 있습니다.<sup>62)</sup>

또 『대학생』이라는 1981년 7월호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 원썩을 끝없이 미워하도록

남포사범대학을 찾아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우리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 대한 문

61) 『국어(인민학교 제2학년용)』(평양: 교육도서 출판사, 1985), pp. 65-67; 김동규, “북한교육의 기본원리와 이질화 현상,” 『北韓研究(제2권 제2호)』(서울: 대륙연구소, 1991), p. 28 재인용.

62) 북한고등중학교 3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혁명활동> 제23과(한상유외, 2001), p. 43)의 내용일부, 김동규, 앞의 논문(2004), p. 156 재인용.

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인민이 겪은 쓰라린 과거를 잊지 않고 제국주의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여 온갖 계급적 원썬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건결히 싸워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sup>63)</sup>

남조선청소년들이 퇴폐적인 정서풍조로 하여 럽기적인 모험과 순간의 쾌감을 추구하여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 ……남조선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알콜중독과 마약중독, 매음과 강간, 살인행위와 같은 것은 퇴폐적 풍조의 산물이다.<sup>64)</sup>

외세와 매국반역자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찬란한 민족문화와 전통이 심히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있다. 민족성이 여지없이 말살되고 사회생활의 전반에서 민족적인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암흑의 땅 남조선이다.<sup>65)</sup>

썩어빠진 부르조아식 사랑관에 물젖어 가정을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 자본주의사회 청년남녀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다. 이에 따라……리혼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이 현실은 극도의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에 기초한 부르조아사상문화야 말로 사회를 타락시키는 마약과 같다.<sup>66)</sup>

이와 같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어릴 때부터 아동들에게 증오심을 주입시킴으로서 무조건적 애국주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집단주의 교육 강조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장하는 집단주의는 마르크스-레닌의 정치사상적 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집단주의적 교육체제의 확립과 그 효율적 운용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위한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집단주의교육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모든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려는 정치교육의 작업’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sup>67)</sup>

이는 북한 헌법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

63) 『대학생』(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1년 7월호), 김동규, 위의 논문, pp. 29 재인용.

64) 고수길, “청소년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 『주체의 나라6』(평양: 평양출판사 편, 1991), pp. 139-140.

65) 『천리마』 제5호(평양: 천리마사, 1999), p. 61.

66) 『천리마』 제9호(평양: 천리마사, 2000), p. 59.

67) 李中, “集團主義的 教育體制: 그 規範과 運用,” 고현옥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p. 280.

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이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sup>68)</sup>”라며 집단주의 교육을 통하여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도 집단과 전체의 이익,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수령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다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희생정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집단주의는 오직 개인을 위하여 사람들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승냥이 법칙이 지배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도덕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모든 사람들이 자주성을 존중하며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의 기초에 놓여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도덕이다.”<sup>69)</sup>라고 평가하면서, 집단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여 상호경쟁을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리로 삼고 있다면, 공산주의 사회의 가치관은 전체적인 평등을 지표로 삼고 상호협동으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경제의 기본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성과 평등성에는 집단주의 정신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교육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협동을 원칙으로 하는 집단주의의 원리가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sup>70)</sup>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의 생활환경과 교육의 목적, 내용과 방법 등에 반영되고 있으며, 그것은 헌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사회주의교육에서의 집단주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 데 있다. ... 사회주의 사회는 집단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사회적 생산과 생활이 조직화되어 있고 매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전사회의 이익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개인의 이익을 사회와 전체인민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전체의 몫 가운데 자기의 몫도 있다는 집단주의사상과 자기 개인의 모든 생활과 활동을 오직 사회의 통일적인 활동에 복종시킬 줄 아는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sup>71)</sup>

68) 김형찬,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490.

69)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154.

70) 김동규, 앞의 책, p. 22.

71) 김수득,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그 수행방도에 관한 령도적 지침,” 『로동신문』, 1970. 5. 16; 李中, 앞의 논문, p. 289 재인용.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주민 생활의 기본원리인 집단주의에 따라 북한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사회적으로 양육되며, 소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일상적인 의무적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선소년단’, 생활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이 그것이다. 북한청소년에게 있어 학습활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무적 조직생활이다.

북한은 집단주의교양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집단의 힘이 크다는 것을 숙지시키며, “조직과 집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이는 곧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단 속에 매몰된 획일화된 자아만을 의식하게 하며, 자신의 보나 나온 삶을 지향하는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개인만을 인식토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2)</sup>

북한청소년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하는 데에서 비로소 존재 의의 내지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당의 정치적 후비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로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이를 “중요한 공산주의적 시책”이라고 한다.<sup>73)</sup> 이와 같이, 북한의 교육목적은 집단주의 인간, 즉 개인을 버리고 오직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주의적 혁명가를 양성하는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에서 강조되는 집단주의는 학교교육에서는 물론 사회단체 조직생활, 문화예술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을 통제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자유로운 개성의 존중,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 등은 생각하기 어렵다.

요컨대, 북한은 우리와 달리 분단이후 봉건시대 왕조처럼 부자세습은 있었으나 엄밀한 의미의 정권교체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정치교육도 일관되게 추진해온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북한 정치교육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람직한 인간상은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었으나 점차 유일사상체제로 전화되어 가면서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는 다름 아닌 오로지 ‘수령에 충실한 혁명전사’를 말하는 것으로 김일성·김정일에게 절대 충성하는 인간을 말한다. 결국

72) 임순희, 『북한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35.

73) 위의 책, p. 36.

북한은 끊임없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주민들을 체제에 순응하는 신민형(臣民形)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김부자 일가의 우상화와 지배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도구로 전략한 북한의 정치교육은 북한을 떠나서는 어느 곳에서도 통용되고 있지 않다. 진실이 아닌 거짓에 토대를 두고 있는 북한의 정치교육이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정착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74)</sup>

---

74)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 (2004), pp. 178-179.

## VI.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의 과제

남북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서로 다른 이념에 부합하는 정치교육을 통하여 체제에 합당한 인간들을 양성해 왔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인간, 즉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입각한 인간양성에 주력하여 왔고, 북한은 김일성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정치교육,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신념화, 의식화, 행동화하여 오직 김일성·김정일에게만 끊임없이 충성하는 이른바 ‘주체형 인간’ 양성에 주력하여 왔다.

통일은 두 개의 이질적 국가사회로 분열·고착되어 가는 자연추세를 극복하는 인위적 결단과 집요한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업이다.<sup>1)</sup> 이러한 통일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거듭하게 하는 것이자 이질화된 문화를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sup>2)</sup>

통일의 최종 단계인 ‘사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 이는 바로 독일의 통일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독의 사회통합이 어려운 것도 바로 서로 다른 교육목적 아래 서로 다른 인간 형성에 대한 이해 없이 지나치게 정치·경제적 접근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sup>3)</sup> 상이한 정치교육의 목적 하에 정치사회화 과정을 밝아온 남북한 주민들이 만나면 공감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sup>4)</sup> 왜냐하면 남북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이념적으로 대립하며 체제경쟁을 수행함에 따라 많이 부분이 이질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5천년의 역사 속의 60년여 년의 분단기간은 민족의 동질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두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사고 및 생활양식의 영역 등에서 다양한 괴리가 야기되었고, 이러한 괴리를 축소하는 통일의 과제가 지난한 노력과 인내와 비용을 수반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sup>5)</sup>

이는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래 동안 북한체제에 살아온 탈북자들이

---

1) 이상우, “하나의 한국을 향한 우리의 길: 과제의 성격과 정책방향,” 이상우 편, 『統一韓國의 摸索』(서울:박영사, 19787), p. 12.  
2) 『통일교육기본지침서』(통일부, 2004), p. 17.  
3) 조홍식, “남북한 사회통합과 노동자복지,” 『남북한 통합과제와 통일연구』(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창립기념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2006. 5. 18), p. 5.  
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앞의 책, pp. 28-29;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와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2001년 탈북자 5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79%가 “남한 사람들이 북한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조선일보』. 2001. 12. 13.  
5) 『통일문제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pp. 144-145.

체제와 이념이 전혀 다른 남한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와 상이한 체제와 이념 속에 살아왔던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은 곧 남북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실시했던 각종 통일교육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6)</sup> 만약 그동안 실시하였던 통일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남한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잘 이해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그렇게 되었다면 탈북자들도 우리사회 정착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으로 남북한사회에 통합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교육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 1. 통일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형 개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교의 이상 세계인 대동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자와 맹자는 인애를 중시하는 인간형을, 그리고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을 주창했던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적 평등에 입각한 인간형을 지향하여 왔다. 정부수립 후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인간형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적 인간 형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란 자아 및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인 동시에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류평화건설에 기여하는 세계평화주의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비록 정권의 성격에 따라 여러 번 왜곡되거나 굴곡 된 적은 있으나 한 번도 이 두가치가 배제된 적은 없었다. 정부 수립이후 단절 없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란 인간존중과 자아실현의 가치구현, 다원성의 존중, 공동선과 정의 실현, 인류애와 평화애호정신 함양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간형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는 곧 다원주의적 사회로, 개인의 역할이 중시되며 창의성과 독립성이 이상적 가치의 기준이 되며, 다양한 생각이나 사상을 존중히 여기는 다가치적 다층적 사회이다.<sup>7)</sup>

한편 북한은 “당에는 주체사상체계 밖의 다른 사상체계가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체계가 필요 없으며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교양 교양이 있을 수 없다.”<sup>8)</sup>라며 ‘주체형 인간’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북한의 모든 교육은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6) 박찬석외, 『통일교육론』(서울: 백의, 2000), p. 53.

7) 오기성, 『남북한 문화통합』(서울: 교육문화사, 1999), p. 224.

8) 위의 책, pp. 343-344.

특히 북한은 '90년대 위기상황이 고조되면서 '김일성·김정일의 충성동맹과 효자동이',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한 인간형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유일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목적으로 체제유지와 재생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김정일체제의 수호자'를 만드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sup>9)</sup>

북한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주체사상은 얼핏 보면 매우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신민형 인간을 만드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민족의 주체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족주의도 결국 김일성·김정일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김일성민족'으로 까지 왜곡되고 있는 폐쇄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북한은 이와 같이 정치교육을 통하여 김일성주체유일사상체계 이외에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사고를 하는 인간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인간형을 하나의 동일한 인간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다원적·개방적 가치를 가진 남한주민과 획일적·폐쇄적 사고를 가진 북한주민이 한 지역공동체나 같은 조직에서 만나게 될 경우 가치관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여기에는 개인적 가치사이의 갈등, 사회적 가치사이의 갈등, 그리고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 포함된다.<sup>10)</sup>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서독인들 사이의 고정관념은 일시에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상이한 체제에서 성장하여 공동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대해야 한다는 점을 당혹스러워했다. 동독청소년들은 서독청소년들을 활달하며 약삭빠른 사람들로 인식했고, 서독청소년들은 동독청소년들을 둔하고 순진하다고 인식했다. 그 결과 통일이후 서로에 대한 새로운 적대감이 발생하고 있다.<sup>11)</sup> 통일독일의 경험은 서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곳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분단이후 60년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북한 주민이 통합하여 새로운 인간형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더욱이 기계적 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류 보편적 가치관인 자유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서구화되어 버린 우리의 문화적 비주체적 태도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북한처럼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9) 신효숙, "교육제도의 형식과 내용: 사회주의 인간형에서 주체형 인간양성으로," 박호성·홍원표,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2002), p. 238.

10) 김국현,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가치갈등 유형과 가치교수 모형," 『통일정책연구(14권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187.

11) 김국현,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 교육방안," 『통일정책연구12권2호』 (2003), p. 164.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토대로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민족주의를 모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다가오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인간형, 즉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주체형 인간형’을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폐쇄적인 북한에게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치교육은 북한주민들이 어떠한 사고와 행동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획일적·폐쇄적 사고를 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인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다. 통일시대를 위한 새로운 인간형 개발을 준비하지 않으면 독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 2. 가치관 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필요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근원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적 가치간의 또는 동질적 가치에 함축된 문화적 특정화의 결과물 간의 가치갈등이다. 가치갈등은 가치들이 상호경쟁하거나 한 가치가 다른 가치와 대립하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 간, 집단과 집단 간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발생한다. 여기에는 개인적 가치사이의 갈등, 사회적 가치사이의 갈등, 그리고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 포함된다.<sup>12)</sup> 상이한 가치를 학습해온 사람들을 통합하는 일은 쉽지 않는 일이다. 같은 체제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가치관을 통합하기 어렵는데 심지어 체제와 문화가 이질화된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통일한다는 것을 지난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니다.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sup>13)</sup>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정치체제가 주민들을 어떻게 사회화 교육을 시켜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남북한주민이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상호이해이다. 그래서 통일 이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북한 간의 상호이해교육이다. 상호 이해교육이란 통일 후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해를 통하여 자기중심적 이해를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이질문화와의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학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호이해 교육은 이질문화와의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학습하는 것이다. 상호이해교육은 이질문화의 이해과정에서 자기문화, 자기중심주의로부터 해방시켜, 통일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12) 위의 논문, pp. 186-187.

13)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서울: 오름, 2000), pp. 327-329.

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어 살면서 상호교류와 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가치관과 사고방법에서 이질감이 심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될 경우 심각한 문제점들을 낳을 것이다.<sup>14)</sup>

### 상이한 민족주의관의 충돌

우리민족은 역사적으로 우리 것이 아닌 것에 대해 강한 배타성과 차별적 행동을 보여 왔다. 이는 우리민족이 좁은 영토 내에서 농경문화를 토대로 한 단일민족으로 동일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와 다르면 배타적이다. 단적이 예가 국내거주 화교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이다.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또 화교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 왔다. 그래서 화교가 망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sup>15)</sup>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배타적 독립의식이 천 번에 가까운 외침을 받고도 없어지지 않고 굳세게 살아남게 한 것인 지도 모른다. 남북한 북한 분단되기 전에는 동일한 공동체 의식, 즉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분단 이후 체제에 따라 서로 다른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남한은 비록 여러 번의 정변이 있었고, 정치교육도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소 굴절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을 견지하여 왔다. 민족주의의 기본가치를 ‘민족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위가치로는 공동성, 정체성, 주체성, 통합성(일체성) 등을 들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민족의식이 세계가 놀라볼 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했으며, 나아가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으로 치르게 하였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남한의 이러한 민족주의는 민족공영과 민족부흥 등 미래 지향적 측면, 열린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상대적인 자주노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7)</sup>

한편 북한은 일제 식민지배, 한국전쟁을 통한 미군으로부터의 피해경험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배이념인 주체사상과 연계되면서 배타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교육을 통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sup>18)</sup>이나 일본 남한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할 뿐 아니라 지주 등의 착취계급, 부르주아사상, 다원주의 등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시키고 있다.<sup>19)</sup>

14) 정지웅, “교육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한 이론과 교육대책,” 『통일정책연구(14권 1호)』 (2005), pp. 290-291.

15) [http://iwomantimes.com/news/article\\_view.html?channel=%B1%E2%C8%B9%C6%AF%C1%FD&idx=17946](http://iwomantimes.com/news/article_view.html?channel=%B1%E2%C8%B9%C6%AF%C1%FD&idx=17946)

16) 박용현, (2002), pp. 40-41.

17) 전미영,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3집 1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pp. 200-202; 김국현, 앞의 논문 재인용, p. 196.

18) 필자가 아는 미국인 목사가 2006년 6월 북한의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했을 때, 퇴역 북한 군인이 지나가면서 ‘미국 놈치고는 인간이 된 놈’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북한주민들은 ‘미국인’을 부를 때는 통상적으로 ‘놈’자를 붙여 부른다.

북한은 또 역사를 왜곡하여 김일성 가계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부르면서 “태양절은 주체의 태양을 모신 나라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인류의 태양을 받드는 인민만이 전통적인 최대의 경사로 기념할 수 있는 명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독립되고 융성번영하게 된 김일성조선이며 우리 민족은 수령님의 손길에서 구원되고 존엄을 떨치게 된 김일성민족”<sup>20)</sup>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은 역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가계를 우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편적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결국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민족의 위장으로 개인의 가치를 철저히 짓 밝는 전체주의이며, ‘수령’에 대한 우상숭배의 동의어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같이 서로 다른 민족주의 교육을 학습 받아 온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만났을 때,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은 무관심, 불평등, 차별 등의 사회현실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민족 우선주의와 민족감정이 공유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는 심리적 좌절, 새로운 체제에 대한 비판, 상대주민에 대한 반감, 자신의 과거 체제에 대한 비난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반미와 반제국주의(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교육을 받아온 북한주민들이 외국과 다양한 협력과 교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sup>21)</sup>

다른 한편으로는 반미의식과 반제국주의 의식이 높이 체화되어 있는 북한주민들이 통일정부가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경우 국내 좌파세력과 연대하여 새로운 사회운동을 전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동서독 통일이후 다시 나치주의로 돌아가자는 일부 동독주민들의 행동이 이를 암시하고 있다.<sup>22)</sup> 이처럼 서로 다른 남북한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정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 자유민주주의적 인간과 수령중심주의적 인간의 충돌

남한에서의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구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에 기초를 둔 인간존중, 자유·권리, 평등·정의, 박애, 절차존중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들로, 그 구성원들이 의도적 또는 무의도적으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회화 기관

19) 이중재, 『남북한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분석을 통한 이질화 극복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59.

20) 「로동신문」. 1998년 4월 15일자 사설.

21) 김국현, 앞의 논문(2005), p. 196.

22) 독일 정보기관에 따르면 구동독지역에 신나치 극우파로 지목된 사람은 모두 4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동아일보」.2006. 10. 26.

들을 통하여 학습 받는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방적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의 덕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러나 북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존중의 가치도 찾기 어렵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하여 최소한의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가치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어릴 때부터 자아를 찾기 전부터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교육과 적대계급과 적대세력, 즉 미국과 남한을 미워하도록 하는 증오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한 서로를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인간 상호간에 인간애를 갖지 못하게 한다. 북한의 교육은 결국 북한 주민들을 분노심과 전투적·비판적 성향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을 토대로 다양성과 개방적인 사회에서 살아온 남한사람들과 자아가 없이 오직 당과 수령만을 위해 충성하다가 살아온 삶들이 만날 경우,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에서 획일화된 교육을 받아 온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민주주의적 인간으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피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다. 만약 통일이전에 가치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단의 장기화에 비례하여 가치갈등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sup>23)</sup>

### 3. 북한주민들의 정신적·심리치료 방법 준비

구동독 정신과 의사인 한스-요하임 마츠는 사회주의체제하의 동독주민들의 심리상태를 정신적미숙아로 보았다. 과거 동독 국가가 주민들에게 각종 시혜적 사회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주민들을 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해 공포와 위협을 주로 사용했다. 개인은 공포와 위협에 순응하면서 국가가 베푸는 시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체제하의 인간은 정신적 미성숙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마치 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조건으로 하듯이 국가에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도전정신을 전혀 키우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마츠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권위주의적 친진난만함’이라는 말로 표현했다.<sup>24)</sup>

그는 또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만성적 좌절이 야기한 감정정체에 대해서 자세한 심리적 분석을 통하여, 인간의 욕구충족이 만성적으로 제약되면 곧 성격왜곡이 일어

23) 김국현, 앞의 논문(2005), p. 187.

2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앞의 책, pp. 41-42.

난다고 보았다. 성격왜곡은 언제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왜곡현상이 보편화되어 정상적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오직 이 성격왜곡을 통해서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전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건전함이란 솔직성, 성실성, 자립성, 비판적 대결능력, 자신의 입장을 갖고 창조적 활동을 하려는 용기 등을 포함한다. 사회주의에서는 이것이 파괴 주의적으로 간주되었고 각 개체로부터 강력히 제거되었던 특성들이다. 사회주의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구조가 각 개체들의 내면에 닳을 내릴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나타나는 적극적 형식으로든지 아니면 굴종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력행사를 감수함으로써 나타나는 수동적 형식으로 가능했던 것이다.<sup>25)</sup>

이러한 성격왜곡이 가장 잘 나타난 사회가 북한일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오래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억압된 통제체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왜곡되어, 이중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투적이고 신경질적이며 공격적이어서 통일이 될 경우 남한주민들과 많은 부분에서 마찰을 일으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왜곡된 내면세계를 치유할 프로그램 개발이 통일교육의 시급한 과제이다.<sup>26)</sup>

또 그들이 남한주민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인데 이것을 보상해 줄 수 없을 경우, 그들은 많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을 것이다. 특히 평등의식이 강한 북한주민의 경우, 자기들은 못사는데 왜 남한사람들은 잘 사는가라는 사회적 불만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sup>27)</sup> 서울 강남의 모교회 권사가 탈북자 2명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나중에 탈북자들이 자기를 단순 비교를 하여 권사를 잘사는데 우리는 왜 17평 임대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 탈북자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4.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용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제도의 이식은 그 제도 뒤에 숨은 ‘인간’에 대한 고려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sup>28)</sup> 이는 독일 통일이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독일이 통일이전 동서독간 오랜 기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접촉을 하고 있는

25) 한스 요하임 마즈, 『사이코의 섬: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서울: 민음사, 1990), p. 72.

26) 탈북이주자인 김명세씨는 탈북이주자들이 기독교에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내적치유 교육을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인 「아버지학교」가 KBS에 소개된 바 있다.

27) 필자가 잘 아는 탈북자 K씨는 남한사람을 보면 괜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아마도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보여 진다.

28) 전성우,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38.

우리의 경우 준비하지 않으면 독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남북한 사회가 통합될 경우 북한주민들은 현재 폐쇄된 체제 속에서 당과 수령이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형 인간 내지 신민형이 아니고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통일이 될 경우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 인간’에서 ‘자본주의 인간’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때 나타날 인간의 사고나 형태는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체제를 모두 경험한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연구는 통일이후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 5. 지역감정을 넘어 한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의 정치교육 준비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 대해 애착을 갖는다거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모인다는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것은 서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끼리 가까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지역을 배제하면서 자기지역의 이익만을 늘리려는 지역주의는 지역감정이라는 허위의식을 낳고 결국 지역대립이라는 갈등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지역감정이 자라나면 편견이 일상화되고 지역대립이 차별로 이어져 인사, 지원, 가치의 배분에서 균형이 깨어지고 결국 사회통합은 후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지역주의가 언제부터 한국인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sup>29)</sup>

지역감정이 언제부터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삼국시대 백제가 망하면서부터 영호남의 차별이 생겨났다는 주장과 고려왕건이 <훈요십조>, 이종환의 <택리지> 등 역사적 고찰에서부터 해방후 박정희정권의 영남우대와 호남차별 등 정치적 고찰 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sup>30)</sup> 아무튼 이러한 지역감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고 늘 주장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교묘히 이를 이용하여 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편 가르기를 해서 이득을 보려는 정치인들의 구호보다는 정책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지역감정뿐만 아니라 북한을 보는 관점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는 남남갈등, 그리고 경제적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누어지는 양극화 현상 등 보다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어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의 수차례 ‘반중과투쟁’을 거쳐 1인 체제를 공고히 하였고<sup>31)</sup>,

29)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 264.

30) 위의 책, pp. 264-272.

31) 김일성은 한국전쟁 직후 허가이, 무정, 박헌영 등 소련과와 연안파, 남로당 주요인물 등을 숙청하였고, 67년 5

과거 봉건적 잔재를 척결한다는 명분아래 전통적 집안이나 가문의식을 타파하였을 뿐 아니라 집단거주 이주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파벌이나 지역감정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보다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가 심하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함경도 출신들은 거칠고 고집이 세며, 잔 머릴 잘 굴린다고 보고 있고, 또 평양사람들은 여우이고 겉과 속이 다른 교묘하다고 평가하지만 남한의 영호남처럼 심하진 않은 것 같다.<sup>32)</sup>

남북한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통일이 되었을 경우, 독일이 통일이후 동독인과 서독인의 지역의 골이 깊어 진 것처럼, 남북한은 기존의 지역감정에 남과 북한이라는 또 다른 지역감정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 그뿐 아니라 통일 후 북한에서의 구체제의 기득권집단과 피해자 집단간의 갈등, 통일 후 새로이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간의 갈등, 남북한간의 지역갈등이 중첩됨으로써 사회균열과 이질성이 심화될 수 있다.<sup>33)</sup>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가진 편견은 통일이후 상호접촉이 확대 되어지는 생활세계에서 구체적인 차별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주민들은 남북한 주민별로 상이한 심리적 갈등과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남한주민들의 경우 북한국가 또는 체제와 주민을 동일시함으로써 북한주민을 몰개성화하여 그들을 열등하고 불쌍하며, 공격적이며, 폐쇄적이며, 촌스럽다는 등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 동업, 결혼 등에서 차별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감은 북한주민의 심리적 갈등과 장애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경우 남한주민들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퇴폐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근원적으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감정은 그들로 하여금 남한주민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에의 소속감을 거부하게 될 위험성을 가진다.<sup>34)</sup>

지역감정과 이념갈등 등이 통일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 만약 지금과 같이, 동서간의 지역감정과 이념적 갈등을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 된 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북 간의 지역감정, 이념적 갈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젠 지역적인 문제를 떠난 21세기 한민족공

---

월 박금철, 리효순 등 갑산파를 숙청함으로써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 43-44.

32) 이 주장은 진북한 외교관 출신과 함경도 회령에서 교사하다 온 탈북자와 필자가 아는 다른 탈북자들로 부터 전해들은 것이다.

33) 박영호, 『통일이후 국민통합방안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35.

34) 김국현, 앞의 논문(2003), p. 177.

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서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남남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래 동안 공산치하에서 억압받고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품는 민족통일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 VI. 맺음말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고, 나아가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동독주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이루어진 독일통일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민족은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단일민족으로 동일한 정치사상과 문화체제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해방 더불어 분단된 이후 반세기가 넘게 상이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교육을 통하여 체제에서 요구하는 인간들을 양성해 왔다.

남한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 하에 열린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한 인간을, 북한은 단친 민족주의와 오직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주체형 인간을 양성해왔다. 그 결과 이제 남북한 주민은 서로 다른 사고와 행동을 하는 등 많은 부분이 이질화되었다. 통일은 이렇게 이질화된 인간 즉, 열린 가치관을 학습해온 남한 사람과 세계에서 가장 폐쇄화·획일화된 가치관 교육을 받아온 북한사람이 만나 이질감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오래 동안 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한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상적·이념적 갈등은 물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형사·경제사범, 문화적 격차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등 무수히 다양한 형태의 치안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할 1차적 책임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있다. 우리는 사상적·이념적 분열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지를 해방직후 일어난 각종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남북한 사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조직 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늘 문제가 생기면 근시안적 대응요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거시적 차원에서, 앞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일을 대비한 별도 팀을 구성하여 통일한국의 치안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탈북자를 관리하고 있는 보안경찰의 경험들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을 둔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주민이 보여줄 행동양상은 탈북자들이 남한사회 적응과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탈북자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보안경찰들은 남북한이 통합될 때 일어날 일들을 사전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탈북자 관리 경험은 장차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지역 치안 확보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그러므로 탈북자관리 보안경찰들의 경험들을 데이터베이스 해두고, 이를 토대로 통일이후 치안유지를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교육기관에서 북한사회와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과목을 신설하여 북한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여 남북한 사회 통합을 대비한 정치교육을 실

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남북한 사회통합 후 일어날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며, 나아가 통일 치안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현성, 『통일과도기 치안수요예측과 경찰대응방안 연구』, 치안연구소, 1998.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위임, 『북한연구방법론』, 한울, 2003.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남북한 통합과제와 통일연구』, 2006.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팀,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랜덤하우스중앙, 2005.
-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2006.
-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2004.
- 『남북한 사회통합』,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국현,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가치갈등유형과 가치교수모형,” 『통일정책연구14권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 교육방안,” 『통일정책연구12권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김해순, 『통일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 김석향, 『남북한 주민간 갈등양상과 기독교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기독교 북한선교회, 2006.
- 고정식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2004.
- 서울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연구위원회, 『남북통일 대비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994.
- 민성길·전우택·윤덕용,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출판부, 2002.
- 민병천,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0.
- 서재진,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통일연구원, 1999.
- 박찬석외, 『통일교육론』, 서울: 백의, 2000.
- 박종철·김영운·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의 체제적응 방안』, 중앙대학교 체제적응연구센터, 1997.
- 민성길·전우택·윤덕용, 『탈북자와 통일준비』, 연세대출판부, 2002.
- 조용관·김병로, 『북한한걸음 다가서기』, 예수전도단, 2002.
-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7.
- 한스 요하임 마즈, 『사이코의 섬: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서울: 민음사, 1990.
- 이금순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이관희, 『독일통일과 독일경찰조직의 정비』, 치안연구소, 1996.
- 金鎮道, 『北韓離脫住民의 社會適應 프로그램 改善方案』,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9.
- 윤종진, “김정일 등장이후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변화분석,” 『통일정책연구13권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장호, “북한출신 주민 심리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상)”, 『북한』, '97년 11월호.
- 윤인진, “탈북자와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2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0.
-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제1권 2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 전우택,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1999.
-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5집 2호)』.
- , “탈북자 남한사회 적응 실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북한 인권 및 탈북자문제, 그해결 방안은?』,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세미나, 2004.8.
- 김동규, 『社會主義 敎育學』, 서울: 主流, 1988.
- \_\_\_\_\_, “북한의 소·중학교 교과내용에서의 남북통일 관련 학습단원 내용의 분석과 평가”, 『서울평양 학보 (제3집 1호)』, 서울평양학회, 2004.
- \_\_\_\_\_, “북한교육의 기본원리와 이질화 현상”, 『北韓研究(제2권 제2호)』, 서울: 대륙연구소, 1991.
- 김영국, “國民倫理의 機能”, 韓國國民倫理學會편, 『國民倫理學 概論』, 서울: 형설 출판사, 1987.
- 김형찬,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교육부, 『교육월보』, 1991년 12월호
- 박용현, 『가치교육의 변천과 가치의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_\_\_\_\_, 『민주화 세계화와 교육과제』, 서울대출판부, 1996.
- \_\_\_\_\_, “이데올로기와 國家安保”, 『韓國安全保障論叢 第14輯』, 國家安全保障會議, 1987.
- \_\_\_\_\_, “정치교육의 성격과 과제”, 『정치교육』, 한국국민윤리학회, 1983.
- 裴燦福, 『南北韓의 政治社會化』, 서울: 法文社, 1989.
- 李寬熙, 『韓國民主憲法論 I』, 서울: 博英社, 2004.
- 이수윤, 『정치학개론』, 서울: 법문사, 2002.
- 임순희, 『북한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文昌周, 『韓國政治論』, 서울: 博英社, 1975.
- 李海成, 『統治體制的 矛盾과 學校敎育』, 서울: 청아, 1988.
- 신정현외, 『民主市民敎育論』. 서울: 탐구당, 1997.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 손풍삼, 『한국의 정치교육과 정치발전』. 서울: 연방검, 1996.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第6共和國 實錄4』. 서울: 공보처, 1992,
- 韓培浩·魚秀永 『韓國政治文化』, 서울: 法文社, 1987.
- 한국교육개발원, 『북한교육관계법령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任時先, 『中國教育思想史』,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78.
- 『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이다』, 서울: 동광출판사, 1994.
- 中央大學校 韓國教育問題研究所, 『文教史』, 서울: 中央大學校 出版局, 1974.
- Bruce Cumming 외, 박의경역, 『韓國戰爭과 韓美關係』, 서울: 청사, 1987.
- 유안진, “한국 전통사회의 특성과 초기 사회화”, 『한국인의 초기 사회화 과정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_\_\_\_\_, “교육제도의 형식과 내용: 사회주의 인간형에서 주체형 인간 양성으로” 박호성·홍원표,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2002.
- 이서행, 分斷克服 및 統一問題의 관점에서 본 理念論爭: 民族主義의 韓國化過程을 중심으로, 강광식의, 『現代 韓國體制論爭史研究』,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金正吉, 「韓國政治教育政策의 位相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李中, “集團主義的 教育體制: 그 規範과 運用”, 고현욱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 최선우, “남북통일에 따른 치안예측과 경찰의 대응전략”, 『통일정책연구11권1호』, 통일연구원, 2002,
- 조희연, “80年代 民主化運動과 體制論爭”, 강광식의, 『現代 韓國體制論爭史 研究』,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민정신교육총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鄭朱玆, 「美軍政期 社會生活科(Social studies)의 導入過程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용민, “서양정치사상에 있어서 정치와 교육”, 『세계화와 민주화시대의 정치와 교육』, 한국정치학회, 1997.
- 金亨植, 「金日成과 金正日의 體制維持 政策에 관한 比較」,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광주, “집권관주의적 신중상주의 국가론: 권위주의 국가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서울: 법문사, 1986.
- 이계희, “北韓의 思想政策과 政治教育”, 『統一問題研究』, 국토통일원, 1989.봄.
- 韓萬桔, “教科課程과 國家의 社會統制”, 『교육개발』 (제8권 제4호),
- \_\_\_\_\_, “개방적 정치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정치학회. 『세계화와 민주화시대의 정치와 교육』. 1997.
- 홍득표, “서양 정치교육의 체제와 내용”, 한국정치학회 『세계화와 민주화시대 정치와 교육』, “교육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한 이론과 교육대책”, 『통일정책연구14권1호』. 서울: 통일연구

원, 2005.

최준영, 「북한소학교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 분석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승현, 「북한의 정치적 변화요인이 청소년 학생들의 정치사상교육에 끼친 영향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조선대백과사전 19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김정일선집(제8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James S. Coleman(ed.),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65.

Tom Brennan, *Political Education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 Press,1981.

책임연구보고서 2006-09

## 통일대비 정치교육의 과제 -남북한 정치교육 비교를 중심으로-

---

2006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1길 29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